경제적 언어의 이해 해설집 v1.1

1. 1994학년도 1차 수능 … 2쪽
— 시장의 성격 변화와 기업 활동의 변화

2. 1994학년도 2차 수능 … 4쪽
— 경제학이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들

3. 2001학년도 수능 … 5쪽
—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기반한 호혜적 교환관계

4. 2002학년도 수능 … 11쪽
— 기업이 추구하는 이익의 종류

5. 2003학년도 9월 모평 … 15쪽
— 노동 시간 단축에 관한 노사정 3자의 견해차

6. 2006학년도 9월 모평 … 19쪽
— 카네만의 인지 심리학적 경제학 연구

7. 2006학년도 수능 … 23쪽
— 옵션의 원리와 기능

8. 2008학년도 6월 모평 … 28쪽
— 위치적 외부성의 의미와 효과

9. 2008학년도 수능 … 31쪽
— 공공사업의 타당성 진단과 할인율의 적용

10. 2009학년도 6월 모평 … 34쪽
— 조세전가 현상의 이해

11. 2010학년도 수능 … 37쪽
— 기업 결합의 성립 요건

12. 2011학년도 9월 모평 … 41쪽
— 환율의 상승과 J커브 현상의 이해

13. 2011학년도 수능 … 46쪽
— 채권 가격의 형성 요인에 대한 이해

14. 2012학년도 9월 모평 … 49쪽
— 한계비용과 공공 서비스의 가격 결정

15. 2012학년도 수능 … 52쪽
— 외부성 현상과 그 해결책

16. 2013학년도 수능 … 54쪽
— 연금 제도의 시행 목적

17. 2014학년도 예비B … 작성중
—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양극화 현상의 이해

18. 2015학년도 6월 모평A …
— 인센티브 계약의 종류와 그 효과

19. 2015학년도 6월 모평B …
— 광고 피해의 책임 주체와 광고의 규제

20. 2015학년도 수능A …
— 공공 서비스의 특성과 종류

21. 2015학년도 수능B …
— 시민 사회와 산업 자본주의

22. 2016학년도 6월 모평AB …
—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23. 2016학년도 6월 모평B …
— 벡과 바우만의 '현대의 개체화 현상'

24. 2016학년도 9월 모평A …
—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

25. 2016학년도 9월 모평B …
—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

26. 2016학년도 수능B …
— 지식 경영과 암묵지

※ ①~⑤ 선지별 해설의 경우 문제의 발문 형태(적절한 것은? or 적절하지 않은 것은?)와 관계없이, 본문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적절한 것은 (O)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X)로 표기하였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19940827 ~ 30《1994학년도 1차 수능 문항 해설》

(가)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큰 전환이 이루어졌다. 기업이 그 존속과 성장을 위해 소비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시장은 생산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태도를 바꾸어, 소비자의 잠재적 욕구를 파악하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략을 채택해야만 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을 책정하게 되었다. 즉, 제품을 시장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전략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일단 상품을 생산해 놓고 나서 그것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략이 아니다. 오히려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것을 생산하고,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소비자)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의 극대화라는 기업의 이념은 변함 없지만, 시대의 요구에 따라 기업 활동의 성격은 변화한다.

(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대체로 가격 수준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양이 조절된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요인과 비가격 요인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구매자 중심의 시장에서 가격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가격 이외에 판매점, 상표, 디자인, 신속한 배달과 수리, 광고 등과 같은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소비자의 선택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기업은 기업과 소비자와의 호혜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점에서 기업은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동안 기업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양립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기업들이 환경 문제나 사회 복지 등과 관련된 요인을 ㉠**잘 살피지 않고 지나쳐 버렸다**는 것이다. 오늘날 기업 활동에 관한 연구가 단지 기업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업 활동과 사회 전체의 균형적 발전간의 문제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현대 기업은 단기적으로 이윤만을 추구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소비자의 생활 수준과 문화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27. 윗글은 다음 중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는가?

① 기업 활동의 성격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 (O) 시장의 성격이 바뀜에 따라 기업 활동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⑤ 생산과 서비스의 관계는 어떠한가?

➡ (X)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으로서 '제품'과 '서비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 의하면 '생산'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과 '서비스'의 관계는 본문의 극히 일부에서만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답으로 볼 수 없습니다.

28. (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해당이 되는 어구는?

③ 호혜적 관계

➡ (O) (나)는 구매자 중심의 시장에서는(시장의 성격 변화) 기업이 소비자와의 호혜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기업의 활동 변화)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단기적 이윤추구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버리고,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고려하고, 소비자의 생활 수준과 문화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호혜적 :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 받는.

29. 다음 중, 그 뜻이 ㉠으로 풀이될 수 있는 단어는?

① 경시(輕視)했다

➡ (X)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여기다.

② 간과(看過)했다

➡ (O)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

③ 몰각(沒却)했다

➡ (X) 「1」 아주 없애 버리다. 「2」 무시해 버리다.

④ 무시(無視)했다

➡ (X) 「1」 사물의 존재 의의나 가치를 알아주지 아니하다. 「2」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기다.

⑤ 묵과(黙過)했다

➡ (X) 잘못을 알고도 모르는 체하고 그대로 넘기다.

30. ㉡과 같은 기업 활동의 예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⑤ 소비자의 잠재적 욕구를 파악한다.

➡ (X) 소비자의 잠재적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구매자 중심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 전략입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활동이며,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본문에서 예로 든 '환경 문제나 사회 복지'와 같은 것)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활동(제품 생산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더 읽어볼 이야기》

(가)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큰 전환이 이루어졌다. 기업이 그 존속과 성장을 위해 소비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시장은 생산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제시문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가 전환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세계 경제는 어떠했을까요?

16세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자본주의는 주로 상업 활동에서 이윤을 창출했던 상업자본주의, 산업혁명 이후 공장제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한 산업자본주의를 거쳐 19세기 말에는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산업자본주의 말기에는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다른 기업들을 망하게 하거나 병합하는 활동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그 결과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대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산업 자본에 은행 자본까지 융합되면서 덩치가 커진 소수의 대기업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이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배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대기업에 생산과 자본이 집중되어 있던 만큼 새로운 경쟁자는 나타나기 어려웠죠.

이렇게 소수 대기업이 시장의 이익을 독식하던 시대는 1929년 대공황을 시작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세계 경제가 하락했던 시기입니다.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소비자들의 구입이나 기업의 신규투자가 위축되었고, 이는 곧 생산과 고용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독점자본주의 체제는 대기업의 대량생산을 받아줄 독점적 소비시장인 식민지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국주의와 함께 가는데요, 대공황 기간 동안 제국주의 열강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 보호무역을 전개합니다. 자신들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역(식민지 등)을 각자의 경제 블록으로 설정하고, 관세 장벽을 높여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 경제 블록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이 벌어집니다. 경제적 갈등이 군사적 갈등으로 터져나온 것이죠.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서방 국가들은 자유무역과 정치적 평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차원의 안정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적 번영과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브레턴 우즈 협정이 맺어집니다. 1944년 미국 브레턴 우즈에서 44개 연합국 대표들이 모여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한 고정환율제*의 도입을 통해 자유무역과 세계번영을 도모한 국제회의였죠. 협정문 전문의 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 이제 각국은 국제 금융거래의 문제에 대해 서로 조언을 구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세계의 번영에 해롭다고 의견이 일치된 행위는 불법화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 수지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한다. …"

이 협정을 실행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이 탄생합니다.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와 같은 국제무역의 규칙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식민지와 무역장벽에 기반한 제국주의적 독점자본주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정치적으로는 미국-소련 냉전 체제가 세계를 양분하고, 경제적으로는 브레턴 우즈 체제로 자유무역이 강조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생산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시장의 성격이 변화하였다는 제시문의 서술은 바로 이러한 기업 활동의 변화를 뜻합니다.

*기축통화 Key Currency :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19세기 중반부터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담당했었고, 이후 제1차 세계 대전(1914~1918) 동안 막대한 부를 얻은 미국이 브레턴 우즈 협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금 1온스(28.35g)를 35달러로 고정시키고, 다른 나라의 화폐는 달러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금환본위제를 수립한 것이죠. 당시 미국은 전 세계 금의 2/3를 보유하고, 전 세계 산업 생산량의 1/2을 담당하고 있던 전무후무한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한 협정이었습니다.

*고정환율제 fixed exchange rate system : 지금은 대다수 국가에서 변동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환율의 변동을 정부가 통제하여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35달러는 금 1온스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끔 규정해놓았고 나머지 국가의 화폐는 달러에 고정시켰기 때문에 금을 기준으로 모든 화폐가 일정한 교환비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환율에 개입하는 체제를 고정환율제라고 합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19941143 ~ 45《1994학년도 2차 수능 문항 해설》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경제 법칙은 합리적인 사람이 많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은 사회에 잘 적용되는 법칙이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 정책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의 자질이 떨어질 때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처방이 나왔다 하더라도 경제 동향에 미치는 ㉠**민심의 흐름**이나 경제 사회 분위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현실 사회에 그 처방을 물리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의 방향은 ㉡**민심의 향방**에 크게 좌우된다.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가정하나 동물 근성도 잘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쉽사리 감정적이 되며, 경제 사회가 불안할수록 동물 근성이 잘 발동된다. 이런 의미에서도 경제 안정은 근본 문제가 된다. 그리고 경제는 이러한 인간의 경제 행위를 바탕으로 하므로 그 예측이 어렵다. 가령 일기 예보의 경우에는 내일의 일기를 오늘 예보하더라도 일기가 예보 자체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기 예측(景氣豫測)의 경우에는 다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기 침체를 예고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비하여 행동을 하고, 반대로 경기 회복을 예고하면 또한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경기 예측 그 자체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예측이 어느 정도 빗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될 것이다' 또는 '안 될 것이다'와 같은 예측은 이른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소지가 크다.

경제 문제는 인간의 가치 판단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가령 '갑'은 젊고 유능하며 부양 가족이 없는데도 많은 봉급을 받는 데 비하여, '을'은 늙고 무능하나 많은 식구를 부양하는데도 적은 봉급을 받는 경우, 양자의 소득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집 값이 집 없는 사람의 봉급보다 빨리 상승한다든가, 고급 주택의 건설이 많아진다든가 할 때, 주택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은 감정이나 가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다.

43. 윗글에서 경제학이 고려할 사항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 감정 ② 합리성 ③ 가치 판단 ④ 동물 근성
➡ (O) <해설 생략>

⑤ 지역 경제
➡ (X) 지역 경제는 본문 어느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 없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경제 정책을 만들 때에는 지역 경제도 고려해야 하겠지만요.

44. 문맥상 ㉠, ㉡에 공통적으로 바꾸어 넣을 수 있는 것은? [0.8점]
① 여파(餘波)
➡ (X) 「1」 큰 물결이 지나간 뒤에 일어나는 잔물결.
「2」 어떤 일이 끝난 뒤에 남아 미치는 영향.

② 정세(政勢)
➡ (X) 정치상의 동향이나 형세.

③ 사조(思潮)
➡ (X) 한 시대의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

④ 여론(輿論)
➡ (O)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

⑤ 풍문(風聞)
➡ (X)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

45. ⓐ와 같은 인과적 구조를 보여 주는 것은?
① 기술의 혁신은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고, 그것은 다시 오염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
➡ (X) 악순환

② 큰 목소리가 사람들의 대화를 방해하고, 그것은 다시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든다.
➡ (X) 악순환

③ 실내의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 온도 조절 장치에 의해 보일러가 꺼지고, 온도는 다시 내려간다.
➡ (X) 인과적 연쇄

④ 할아버지는 손자가 장차 큰 인물이 되리라고 늘 말하였고, 그 말에 용기 백배한 손자는 열심히 일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 (O) 예언 및 예측(큰 인물이 되리라)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으므로(큰 성공을 거둠) 적절한 사례입니다.

⑤ 풀어진 신발 끈을 다시 묶느라 집을 약간 늦게 출발하였고, 그래서 그는 기차를 놓쳤고, 그래서 그는 시험을 치르지 못했고, 그 결과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
➡ (X) 인과적 연쇄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푼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밥그릇도 미련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리오 법칙은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찼을 경우 보복의 대상은 밥그릇으로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를 뒤엎는 것으로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대일 방식의 상호주의를 '대칭적' 상호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교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셈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인각색(各人各色)인 까닭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 · 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장군 멍군 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3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보편화되어 있다.

➡ (X) 대칭적 상호주의는 일상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② 사람들의 기호 및 자원에는 차이가 있다.

➡ (O) 셈에 밝은 경제적 인간들은 선호나 기호, 가진 자원이 다양하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③ 비대칭적 상호주의는 쌍방에게 이익을 준다.

➡ (O) 비대칭적 상호주의는 상호 이익을 보장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④ 행위자의 자발성과 절차적 공정성은 호혜적 교환 관계의 전제 조건이다.

➡ (O) 윗글은 호혜적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뚜렷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시장을 들었고, 시장이 기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행위자의 자발성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교환 과정의 공정성은 곧 절차적 공정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저하다: 뚜렷이 드러나 있다.

⑤ 반시장적 요소와 비시장적 요소는 서로 다른 의미이다.

➡ (O) 반시장적 요소는 강매나 사기와 같이 자발성을 제한하고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반면 비시장적 요소는 자발성과 공정성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견지하다: 【…을】「1」 어떤 견해나 입장 따위를 굳게 지니거나 지키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푼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밥그릇도 미련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리오 법칙은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찼을 경우 보복의 대상은 밥그릇으로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를 뒤엎는 것으로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대일 방식의 상호주의를 '대칭적' 상호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교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셈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인각색(各人各色)인 까닭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 · 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장군 멍군 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38.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가설을 먼저 설정한 후, 그것을 구체적 현상에 적용하였다.

➡ (X) 윗글에는 어떤 가설*도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설:
「1」『철학』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정.
「2」『사회 일반』 사회 조사나 연구에서, 주어진 연구 문제에 대한 예측적 해답.

② 다양한 학설들을 소개한 다음,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열거하였다.

➡ (X)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둘 이상의 학설*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설: 학술적 문제에 대하여 주장하는 이론 체계.**

③ 정의, 비교·대조, 예시의 방법을 활용하여 현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 (O) 윗글은 상호주의와 시장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고, 대칭적 상호주의와 비대칭적 상호주의를 비교하여 더 일상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탈리오의 법칙이 지닌 두 가지 속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시가 사용되었음은 물론이죠. 이들은 모두 '사회적 관계'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④ 여러 가지 특수한 사례로부터 현상에 대한 보편적 이론을 도출하였다.

➡ (X) 윗글은 특수로부터 보편을 이끌어내는 귀납* 추리 방식으로 전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귀납: 『철학』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 및 법칙을 유도해 내는 일.

⑤ 현상을 바라보는 상반된 주장을 대비한 다음, 절충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 (X) 윗글에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절충적 관점도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푼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밥그릇도 미련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리오 법칙은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찼을 경우 보복의 대상은 밥그릇으로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를 뒤엎는 것으로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대일 방식의 상호주의를 '대칭적' 상호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교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셈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인각색(各人各色)인 까닭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 · 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장군 멍군 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39. ㉠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① 내가 무슨 셈을 따져서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다. (정비석, 「비석과 금강산의 대화」)

➡ (O) 윗글에서 '경제적 인간'을 수식하는 데 활용된 '셈에 밝은'이란 문구는 '손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①에 쓰인 '셈을 따져서' 또한 이익과 손해를 따진다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정답은 ①번입니다.

② 그로서는 만세를 불렀다는 말이 마지막 방패였던 셈이다. (박경리, 「토지」)

➡ (X)

③ 나는 처음에 어떻게 되는 셈인지 몰라서 멀거니 천장만 한참 쳐다보았다. (김유정, 「안해」)

➡ (X)

④ 조금만 셈이 피면 공부를 시켜서 제 손으로 벌어라도 먹게 만들어 주고 싶지만……. (염상섭, 「삼대」)

➡ (X)

⑤ 윤태는 벌써 한 달이 넘게 오르내린 층계건만 발을 옮길 때마다 번번이 그 숫자를 셈하게 되는 것이 싫었다. (유주현, 「하오의 연가」)

➡ (X)

*셈
[Ⅰ] 「명사」
「1」 수를 세는 일.
「2」 주고받을 돈이나 물건 따위를 서로 따져 밝히는 일. 또는 그 돈이나 물건.
「3」 수를 따져 얼마인가를 세어 맞추는 일.
「4」 이익을 따져 보는 생각.
「5」 생활의 형편.
「6」 어떤 일이나 사실의 원인. 또는 그런 형편.
「7」 사물을 분별하는 슬기.
[Ⅱ] 「의존 명사」
「1」 ((주로 '-은/는 셈이다', '-은/는 셈으로' 구성으로 쓰여)) 어떤 형편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말.
「2」 ((주로 '-을 셈이다', '-을 셈으로' 구성으로 쓰여))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말.
「3」 ((주로 '-은/는/을 셈 치다' 구성으로 쓰여)) 미루어 가정함을 나타내는 말.

*셈하다
「동사」【…을】
「1」 수를 세다.
「2」 주고받을 돈이나 물건 따위를 서로 따져 밝히다.
「3」 수를 따져 얼마인가를 세어 맞추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011140《2001학년도 수능 문항 해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푼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밥그릇도 미련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리오 법칙은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찼을 경우 보복의 대상은 밥그릇으로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를 뒤엎는 것으로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대일 방식의 상호주의를 '대칭적' 상호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교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셈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인각색(各人各色)인 까닭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 · 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장군 멍군 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40.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내기 철에 품앗이를 하였다.

➡ (O) 품앗이는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을 말합니다. 갑이 을의 모내기를 도와주면, 을은 나중에 갑이 요청하는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서로 교환되는 노동의 양이나 질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갑이 100개의 모를 심었으므로, 을도 나중에 100개의 모를 심어준다든지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② 사재기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

➡ (X) 사재기는 행위자의 자발적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판매자의 판매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시장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재기는 호혜적 교환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③ 직장 동료끼리 교대로 점심을 샀다.

➡ (O) 점심을 늘 같은 메뉴로 같은 장소에서 먹는 것이라면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될 수 있겠지만, 상식에 기대어 의미를 해석해보자면(이 시험의 과목명은 논리학이 아니라 언어 영역임) 서로 다른 가격의, 서로 다른 메뉴를 서로 제공하는 호혜적 교환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④ 할인 매장에서 싼값으로 물건을 샀다.

➡ (O) 할인 매장을 운영하는 판매자는 물건 낱개당 남기는 이윤이 일반 매장보다 더 적을 것입니다. 여기서 물건을 구입하는 개별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익입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개별 거래에서 조금 이익을 덜 보더라도, 이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할인 매장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중심가에서 멀어 매장의 임대료는 싸지만 구매자가 방문할 기회가 적은 매장은, 정상가로 판매할 때보다 할인가로 판매했을 때 거래량이 많아져 최종적으로는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상품을 다량으로 매우 저렴하게 구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존의 매장 재고를 빠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판매자의 경우에도 할인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할인 매장에서 교환되는 내용은 양과 질의 측면에 있어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고(할인된 가격), 상호 이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호혜적 교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⑤ 알뜰 시장에서 중고 물건을 맞바꾸었다.

➡ (O) 중고 물품은 교환되는 내용이 양이나 질의 측면에서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물물교환은 전형적인 호혜적 교환 관계입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푼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밥그릇도 미련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리오 법칙은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찼을 경우 보복의 대상은 밥그릇으로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를 뒤엎는 것으로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대일 방식의 상호주의를 '대칭적' 상호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교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셈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인각색(各人各色)인 까닭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 · 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장군 멍군 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41. ㉢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려 할 때, 그 논거로 가장 타당한 것은?

➡ (발문 해설) 어떤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비판'하고자 한다면, 먼저 해당 주장(B)과 그것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A)를 본문에서 명확히 찾아야 합니다. 'A이기 때문에 B하다'는 식으로 본문의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찾았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1)A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방법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2)A가 B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부정하거나, ㉢의 근거만으로는 ㉢을 뒷받침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선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① 반시장적 행위는 상호주의의 산물이다.

➡ (X) 반시장적 행위는 상호주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대칭이든 비대칭이든 상호주의는 서로의 행위가 짝을 이루어야 하는데, 반시장적 행위의 예시로 나타난 강매, 사기, 도둑질은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② 비시장적 요소는 시장의 기능을 보완한다*.

➡ (X) 윗글에서 반시장적 행위는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지 않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시장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시장적 요소는 시장에 부족한 무언가를 보충하여 완전하게 한다고 볼 수 있어 ②번 선지 자체는 적절한 서술이 됩니다. 그러나 ㉢에 대한 반론 근거로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의 논거를 공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완하다: 「동사」【…을】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다.

③ 시장에서는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통용된다.

➡ (X) 선지 자체는 적절한 서술입니다. 그러나 역시 ㉢에 대한 반론 근거로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④ 시장에는 탈리오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X) 선지 자체는 적절한 서술입니다. 만약 시장에 탈리오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쌀 100kg을 쌀 100kg과 맞바꾸러 힘들게 시장까지 나온 판매자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에 대한 반론 근거로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⑤ 반시장적 요소는 시장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다.

➡ (O) 위 선지의 경우 ㉢의 근거가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될 수 있다.'라고 공격하는 것이죠. 이는 (발문 해설)에서 설명한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선지는 ㉢을 반론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푼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탈리오의 법칙은 lex talionis를 번역한 것입니다. 라틴어로 lex는 법을 뜻하며 talionis는 보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반좌법, 동해보복법(같은 해로움으로 보복)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이 법칙은 원시 사회의 정의관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함무라비 법전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제196조 만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의 눈을 상하게 한다.
제200조 만일 누군가가 타인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그 사람의 이를 부러뜨린다.

성서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러한 탈리오의 법칙은 우리가 얼핏 보기에 고대 사회의 잔혹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탈리오의 법칙이 고대 국가 단계로 접어들어 진일보한 정의 관념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고대 국가 성립 이전의 사회에서는 상대의 공격에 대해 무제한적 보복이 이루어졌었는데, 고대 국가 단계로 넘어오면서 법률로써 개인 간의 복수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정확히 상대가 손해를 끼친 수준까지만 보복을 할 수 있게끔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보복에 대해 재보복은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차별적 보복이 이루어지는 혼란한 사회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것 같지 않나요?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셸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인각색(各人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경제활동이 자기애로부터 비롯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경제활동으로부터 그의 수익(만족, 효용,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고 가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미) 인간의 모습은 ‘경제적 인간’이란 용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인간’은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하고 있는 주류 경제학 이론의 기본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적 인간’의 ‘합리성’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곧 ‘합리적 선택’을 의미하는데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선택’이란 여러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익이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을 말하며, 비용은 선택의 대가로 포기하게 되는 것의 가치인 기회비용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 인간’이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 대안을 검토하여 기회비용이 같다면 편익이 큰 안을 선택하고, 편익이 같다면 기회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하는 합리성을 지녔다고 가정된 인간상인 것입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다. 기업 또한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서 탄생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곧 이익은 기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하루 세 번 칫솔질할 것을 권장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두가 이처럼 이를 닦으면 사람들의 치아 상태가 좋아져서 치과 의사의 단기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되므로 치과 의사로서는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칫솔질을 자주 하지 않으면 단기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의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기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소자본끼리의 자유 경쟁 상태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에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소유자가 곧 경영자였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경영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경영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주주의 대리인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장기적 전망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여 경영 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는 경영자의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은 물론 기업의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포함된 다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사회가 어떠한 집단도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원(多元) 사회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이해 집단이 기업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는 노동 조합,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 지역 사회,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다원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요구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의 장기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1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8점]

① 기업은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 주체이다.

➡ (O) 기업은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 주체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산: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재화: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해 주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물건. ex) 빵, 옷, 주택

***서비스: 형태는 없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행위. ex) 교육 활동, 의료 활동

② 기업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는다.

➡ (X) 윗글에서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단기 이익은 극대화 되지만 장기 이익은 감소하거나, 단기 이익은 감소하지만 장기 이익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단기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의 서술은 기업이 단기적 손해를 감수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윗글은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기적 손해를 달갑게 받아들이면(감수하면) 단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일 뿐이지, 이로 인해 장기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는 윗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③ 자본주의 초기에도 기업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켰다.

➡ (O)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장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려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였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④ 전문 경영인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없으면 기업의 장기 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

➡ (O) 주주는 전문 경영인이 단기 이익에 치중하는 경영 활동을 하는지 감시하여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주주의 적절한 감시가 없다면 전문 경영인의 비효율적 경영 활동으로 기업의 장기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이해 집단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 (O) 윗글에서는 오늘날의 기업이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요구도 모두 만족시켜야 장기 이익이 보장되고,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다. 기업 또한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서 탄생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곧 이익은 기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하루 세 번 칫솔질할 것을 권장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두가 이처럼 이를 닦으면 사람들의 치아 상태가 좋아져서 치과 의사의 단기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되므로 치과 의사로서는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칫솔질을 자주 하지 않으면 단기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의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기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소자본끼리의 자유 경쟁 상태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에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소유자가 곧 경영자였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경영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경영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주주의 대리인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장기적 전망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여 경영 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는 경영자의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은 물론 기업의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포함된 다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사회가 어떠한 집단도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원(多元) 사회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이해 집단이 기업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는 노동 조합,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 지역 사회,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다원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요구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의 장기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19. 윗글에서 설명한 기업 목적의 성격 변화 과정과 유사한 것은?

① 관객이 늘어남에 따라 극장이 점차 대형화되었다.

➡ (X) 극장이 대형화되는 것은 질적 변화 없이 양적으로만 외연이 확대되는 것이므로 윗글에서 설명한 기업 목적의 성격 변화 과정과 유사하지 않습니다.

②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우주의 신비가 점차 밝혀지게 되었다.

➡ (X) 우주의 신비가 점차 밝혀지는 것은 우주에 대한 인류의 무지가 줄어드는 것, 또는 우주에 대한 인류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질적 변화 없이 양적으로만 늘어나는 변화입니다.

③ 생산 활동의 신속·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었다.

➡ (X) 자동화 설비는 기존 생산 활동 수단보다 더 뛰어난 수단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도입하는(끌어들이는) 목적은 기존보다 '생산 활동의 신속·정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수단이 무엇이었든, '자동화 설비'는 그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준만 더 높음) 이는 질적으로 다른 목적이 추가되는 기업 목적의 성격 변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④ 인간은 자신의 생존만이 아니라 점차 환경과의 조화도 함께 고려하게 되었다.

➡ (O) 윗글에 나타난 기업 목적의 성격 변화 과정은 '자본가의 이익', 즉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던 것에서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목적인 '사회적 이익'까지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 (A + B)

선지 ④의 '인간'은 '자신의 생존'**만** 추구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환경과의 조화'**도** 고려하게 되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기존의 목적과 질적으로 다른 목적인 '환경과의 조화'를 추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선지의 '인간'의 '고려' 사항의 변화 과정은 기업 목적의 성격 변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⑤ 인류 역사의 초기에는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다가 점차 미래를 위해 음식을 저장하게 되었다.

➡ (X) 초기에는 음식을 버리다가 이후에는 저장하게 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태도나 행동 양식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 B

따라서 이는 윗글의 기업 목적 성격의 변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다. 기업 또한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서 탄생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곧 이익은 기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하루 세 번 칫솔질할 것을 권장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두가 이처럼 이를 닦으면 사람들의 치아 상태가 좋아져서 치과 의사의 단기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되므로 치과 의사로서는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칫솔질을 자주 하지 않으면 단기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의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기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소자본끼리의 자유 경쟁 상태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에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소유자가 곧 경영자였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경영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경영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주주의 대리인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장기적 전망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여 경영 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는 경영자의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은 물론 기업의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포함된 다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사회가 어떠한 집단도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원(多元) 사회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이해 집단이 기업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는 노동 조합,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 지역 사회,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다원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요구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의 장기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20. 윗글의 논지*에 비추어 '기업 : 이익'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논지: 논하는 말이나 글의 취지**.
취지: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목적이나 긴요한* 뜻.
***긴요하다: 「형용사」【…에/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① TV 방송 : 카메라
➡ (X) 윗글에 나타난 '기업'과 '이익'의 관계는 '활동 주체'와 '활동 목적'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TV 방송과 카메라의 관계는 이러한 '활동 주체 : 활동 목적'의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카메라는 TV 방송의 수단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② 시계 : 톱니바퀴
➡ (X) 톱니바퀴는 시계의 구성요소입니다.

③ 연주회 : 지휘자
➡ (X) 지휘자는 연주회를 성립시키는 주체 중 하나입니다.

④ 스포츠 : 규칙 준수
➡ (X) 규칙 준수는 경쟁을 스포츠로 인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⑤ 정당 : 정권 획득
➡ (O) 정당*의 활동 목적은 정권의 획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 이익'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 『정치』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다. 기업 또한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서 탄생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곧 이익은 기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하루 세 번 칫솔질할 것을 권장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두가 이처럼 이를 닦으면 사람들의 치아 상태가 좋아져서 치과 의사의 단기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되므로 치과 의사로서는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칫솔질을 자주 하지 않으면 단기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의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기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소자본끼리의 자유 경쟁 상태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에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소유자가 곧 경영자였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경영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경영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주주의 대리인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장기적 전망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여 경영 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는 경영자의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은 물론 기업의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포함된 다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사회가 어떠한 집단도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원(多元) 사회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이해 집단이 기업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는 노동 조합,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 지역 사회,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다원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요구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의 장기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22. ㉡의 구체적인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업원 연수의 기회를 확대한다.

➡ (X) 종업원 연수의 목적이 직무 능력 향상이라면, 이는 기업이 소유한 (인적) 자원의 가치를 높이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수와 같은 활동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사례로는 볼 수 있겠으나, 사회적 이익의 구체적인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러한 종업원 연수 기회 확대를 통해 직무 능력이 향상되면,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업원 연수의 기회 확대'도 사회적 이익의 구체적 사례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 이익' 추구 활동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므로 위 선지 또한 사회적 이익의 구체적 사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분명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문장을 보아도 '기업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기업의 이익' 그 자체가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말은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② 고객에게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 (O) 고객에게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③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 투자를 한다.

➡ (O)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 투자는 다원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인 환경 단체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지역 사회에 안락한 공원을 조성해 준다.

➡ (O) 지역 사회 또한 다원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로서 이들의 안락함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적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⑤ 불우 이웃을 위한 성금을 낸다.

➡ (O) '불우 이웃'은 본문에서 정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불우 이웃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이들 또한 기업 활동과 간접적 이해 관계에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성금 출연'은 사회적 이익의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얼마나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 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주당 40시간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 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의 이른바 노·사·정 협의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 시간의 양보다 질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노동 시간의 단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늘어난 여가 시간을 통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지식과 경험이 업무 수행 능력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한 개인으로서 인간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됨은 물론, 노동자로서도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된다. 이 경우 직장과 일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잔업이나 특근 등 지난날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했던 직업병과 산업 재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노동자 측의 주장이다.

반면에 기업 측에서는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이 실제로 노동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시간 외 일에 대한 초과 임금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의 생산 차질과 노동 조건을 둘러싼 노사 마찰 때문에 노동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국으로 나가거나 기술 집약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성급한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야기될 노사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사용자 측은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의 대립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초래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실업 문제의 해소를 노동 시간 단축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당 노동 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토요일 휴무에 의한 주 5일제 근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가·문화·교육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경기가 부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회 집단이나 계층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단절이 확산되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기업은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의 질이 하락하여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X) 윗글에서 기업은 (법정)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며, 일부 중소 기업의 경우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을 뿐입니다.

② 노동자는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

➡ (O) 윗글에서 노동자 측은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인간 관계 회복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것, 이로 인한 회복과 재충전은 삶의 질 향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윗글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노동자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능력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O) 윗글에서 노동 시간의 단축은 여가 시간을 늘리고, 늘어난 여가 시간은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업무 수행 능력이 높아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상승은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이익 증대로 연결될 것이므로 이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쟁력: 경쟁할** 만한 힘. 또는 그런 능력.
**경쟁하다: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다.
*제고하다: 쳐들리어 높아지다.

④ 기업은 동일한 노동 생산성 하에서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의 이익이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O) 윗글에서 기업은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이 실제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동일하므로 실제 노동 시간은 그대로일 것인데, 법정 노동 시간만 줄어들 것이므로, 줄어든 법정 노동 시간만큼 시간 외 일의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초과 임금 지급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와 인건비가 상승하고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기업의 이익이 감소될 것이라는 선지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판단됩니다.

(전) 100시간 = 법정 노동 시간 44시간 + 초과 56시간
↓ (법정 노동 시간 4시간 단축) ↓
(후) 100시간 = 법정 노동 시간 40시간 + 초과 60시간

⑤ 정부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뿐 아니라, 노동 시간 단축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고 있다.

➡ (O) 윗글에서 정부는 실업 문제의 해소, 여가·문화·교육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경기 부양을 기대하며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이 초래할 파급 효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030914《2003학년도 9평 문항 해설》

얼마나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 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주당 40시간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 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의 이른바 노·사·정 협의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 시간의 양보다 질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노동 시간의 단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늘어난 여가 시간을 통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지식과 경험이 업무 수행 능력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한 개인으로서 인간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됨은 물론, 노동자로서도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된다. 이 경우 직장과 일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잔업이나 특근 등 지난날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했던 직업병과 산업 재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노동자 측의 주장이다.

반면에 기업 측에서는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이 실제로 노동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시간 외 일에 대한 초과 임금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의 생산 차질과 노동 조건을 둘러싼 노사 마찰 때문에 노동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국으로 나가거나 기술 집약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성급한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야기될 노사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사용자 측은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의 대립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초래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실업 문제의 해소를 노동 시간 단축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당 노동 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토요일 휴무에 의한 주 5일제 근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가·문화·교육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경기가 부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회 집단이나 계층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단절이 확산되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14. ㉠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노동 시간이 단축되어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기업이 감량 경영 체제를 구축한다.

➡ (X) 감량 경영 체제는 불황을 이겨 내기 위하여 기업 규모를 알맞게 줄여 경영하는 방식으로, 이것의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기(불황/호황)이지, 노동 생산성 증가가 아니므로 선지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② 노동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노동 생산성이 증가한다면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 (O) ㉠의 주요 근거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법정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도 실제 노동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전체 노동 시간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초과 근무를 요구하기보다는 추가 고용을 통해 부족한 노동 시간을 채우려 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전) 총 440시간 = 44시간 × 노동자 10명
↓ (법정 노동 시간 4시간 단축) ↓
(후) 총 440시간 = 40시간 × 노동자 11명
(+10% 고용 창출 효과)

그러나 만약 정부의 전제가 틀렸고, 노동자 측의 주장처럼 업무 수행 능력이 높아지고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노동 시간이 단축되는 성과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노동자의 수로 생산되는 상품의 양이 유지되거나 더 많을 수도 있어서(생산성 향상 정도에 따라 다름) 기업에서 굳이 추가로 노동자를 고용할 유인이 없어집니다.

(전) 연필 440개 = 44시간 × 노동자 10명(시간당 1개)
노동 440시간
↓ (법정 노동 시간 4시간 단축) ↓
(후) 연필 440개 = 40시간 × 노동자 10명(시간당 1.1개)
노동 400시간 (+10% 생산성 향상시)

따라서 ㉠의 숨어 있는 전제인 노동 '생산성의 비향상'을, 노동자 측의 논거를 인용하여 공격한 선지 ②의 반론은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실업자가 증가하여 일자리의 공유가 불가능해진다.

➡ (X) 윗글에서 기업 측은 노동 시간이 단축될 경우, 일부 중소 기업에서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 했습니다. 인력난은 노동력이 부족하여 겪는 어려움을 뜻합니다.

④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이 노동자 수를 감축하여 실업자가 양산된다.

➡ (X) 윗글 어디에서도 노동 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수에 대한 감축 우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되어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 (X) 노사 갈등의 심화가 실업자 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030915《2003학년도 9평 문항 해설》

얼마나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 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주당 40시간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 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의 이른바 노·사·정 협의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 시간의 양보다 질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노동 시간의 단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늘어난 여가 시간을 통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지식과 경험이 업무 수행 능력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한 개인으로서 인간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됨은 물론, 노동자로서도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된다. 이 경우 직장과 일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잔업이나 특근 등 지난날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했던 직업병과 산업 재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노동자 측의 주장이다.

반면에 기업 측에서는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이 실제로 노동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시간 외 일에 대한 초과 임금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의 생산 차질과 노동 조건을 둘러싼 노사 마찰 때문에 노동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국으로 나가거나 기술 집약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성급한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야기될 노사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사용자 측은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의 대립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초래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실업 문제의 해소를 노동 시간 단축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당 노동 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토요일 휴무에 의한 주 5일제 근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가·문화·교육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경기가 부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회 집단이나 계층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단절이 확산되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15.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① 노동 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의 불만이 증폭된다.

➡ (X) 농어민은 노동 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맞습니다만, 애초에 법정 노동 시간의 제약이나 혜택을 받았던 계층이 아니므로 노동 시간 단축에 의해 새롭게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② 관광객 수의 증가에 따라 여가 관련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된다.

➡ (X) 노동 시간의 단축에 따라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총수요가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관련 기업의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이러한 경쟁을 사회 계층 간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③ 관광지의 환경이 파괴되어 기업과 환경 단체 사이의 대립이 늘어난다.

➡ (X) 관광객이 늘어나면 관광지의 환경이 파괴되는 수준이나 빈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업과 환경 단체가 대립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광지 환경 파괴의 원인은 기업이 아니라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관광객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④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영세 기업 노동자의 박탈감이 커진다.

➡ (O)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전격 도입되는지 점진적으로 도입되는지, 이에 대해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업 측에서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생각해보면 노동 시간 단축이 사업장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음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가령, 정부가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괄 의무 적용을 하고, 그 이하의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 기간을 두어 중소 기업을 배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대기업이나 일부 중소 기업의 노동자들은 주 5일 근무의 혜택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박탈감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노동 시간 단축에 의해 발생한 갈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 예시로 적절합니다.

*사업장: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
*영세: 「2」 살림이 보잘것없고 몹시 가난함.

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다.

➡ (X)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빈부 격차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노동자는 부유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동 시간 단축과 부유층-빈곤층 사이의 갈등은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030916《2003학년도 9평 문항 해설》

얼마나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 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주당 40시간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 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의 이른바 노·사·정 협의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 시간의 양보다 질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노동 시간의 단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늘어난 여가 시간을 통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지식과 경험이 업무 수행 능력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한 개인으로서 인간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됨은 물론, 노동자로서도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된다. 이 경우 직장과 일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잔업이나 특근 등 지난날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했던 직업병과 산업 재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노동자 측의 주장이다.

반면에 기업 측에서는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이 실제로 노동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시간 외 일에 대한 초과 임금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의 생산 차질과 노동 조건을 둘러싼 노사 마찰 때문에 노동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국으로 나가거나 기술 집약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성급한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야기될 노사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사용자 측은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의 대립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초래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실업 문제의 해소를 노동 시간 단축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당 노동 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토요일 휴무에 의한 주 5일제 근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가·문화·교육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경기가 부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회 집단이나 계층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단절이 확산되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16. 윗글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은?

① 기업의 사업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 (X) 기업의 사업 구조 조정은, 법정 노동 시간 단축이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중소 기업이 택해야 하는 생존 전략으로서, 기업 측이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 측에서 주장된 바가 아니며,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시된 것도 아니므로 정답으로서 부적절합니다.

②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O)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로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들었고, 기업 측에서는 노동 시간 단축의 부정적 효과로서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주체 모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③ 기술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 (X) 윗글에서 기업 측은 법정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 기업의 경우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이 기술 수준이 높은 사업(기술 집약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선지①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노동 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 기업의 대응방향으로 제시된 것이지 기업 측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노동자 측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④ 중소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 (X) 윗글에서 기업 측은 법정 노동 시간 단축으로 중소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므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되며, 넓게 보면 기업 측에서는 선지④를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측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고, 이를 동의한다고 추론할 만한 근거도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육성하다: 길러 자라게 하다.

⑤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 (X) 윗글에서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체는 정부로 나타납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고용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며, 기업 측에서는 인력난*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만 나타날 뿐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은 읽어낼 수 없습니다.

*인력난: 노동력이 부족하여 겪는 어려움.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060936《2006학년도 9평 문항 해설》

날마다 언론에서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경제학에서는 '심리'에 대해 그다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02년에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물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시기에 등장하여 자유방임의 철학에 수정을 가했던 케인스의 경제학이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성찰에 근거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케인스는 인간의 심리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파고들었다기보다, 우리의 의사 결정은 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우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도 파악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인간의 행동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때로는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 그의 생각은 경제학도들 사이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구로 회자되었을지언정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바꾸어 놓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 판단할 때에 '주관적 추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A가 B에 속할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다 A가 B를 얼마나 닮았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거나, ㉡A의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A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거나, 또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자신의 평가를 조정하지만 최종적인 추정 결과는 처음의 평가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주관적 추론은 편리한 인지 방법이지만,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를 낳기 쉽다.

[A]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이들은 합리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비판하는 연구로 나아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득에 관한 의사 결정과 손실에 관한 의사 결정 사이의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위험(risk)'을 기피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위험을 선호하는 비일관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정, 즉 위험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과는 모순된다. 카네만 등은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싫어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해석하였다. 손실은 언제나 이득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합리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다루어 온 경제학으로 하여금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는 그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과연 심리학이 경제학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귀추가 기대된다.

3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① 카네만은 경제학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강조하였다.

➡ (X) 카네만이 등장하기 전, 이미 1930년대에도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성찰에 근거한 케인스 경제학이 있었음이 나타납니다.

② 케인스는 심리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변화시켰다.

➡ (X) 윗글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듯 케인스는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그의 연구는 심리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③ 확률 인지 심리학은 주관적 추론의 체계적인 편향이나 오류를 시정했다.

➡ (X) 윗글에서 확률 인지 심리학은 '주관적 추론'이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를 낳는다는 것을 그저 알아냈다고만 서술되어 있을 뿐, 이를 시정했다고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시정하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④ 확률 인지 심리학의 성과는 경제학의 접근 방법에 중요한 변화를 요구한다.

➡ (O) 윗글에서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성과)는 경제학의 방법론(접근 방법)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나타납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막연한 가정(합리적으로 행동)보다는 그(인간 행동)에 대한 관찰(심리학적 연구)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⑤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인간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 관찰에 기초하여 합리성을 논한다.

➡ (X) 윗글에 나타나듯 기존의 경제학은 인간 행동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다루어왔습니다. 따라서 '관찰에 기초'한다는 서술도 적절하지 않고, '합리성을 논한다'는 서술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060937《2006학년도 9평 문항 해설》

날마다 언론에서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경제학에서는 '심리'에 대해 그다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02년에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물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시기에 등장하여 자유방임의 철학에 수정을 가했던 케인스의 경제학이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성찰에 근거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케인스는 인간의 심리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파고들었다기보다, 우리의 의사 결정은 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우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도 파악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인간의 행동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때로는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 그의 생각은 경제학도들 사이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구로 회자되었을지언정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바꾸어 놓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 판단할 때에 '주관적 추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A가 B에 속할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다 A가 B를 얼마나 닮았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거나, ㉡A의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A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거나, 또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자신의 평가를 조정하지만 최종적인 추정 결과는 처음의 평가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주관적 추론은 편리한 인지 방법이지만,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를 낳기 쉽다.

[A]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이들은 합리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비판하는 연구로 나아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득에 관한 의사 결정과 손실에 관한 의사 결정 사이의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위험(risk)'을 기피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위험을 선호하는 비일관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정, 즉 위험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과는 모순된다. 카네만 등은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싫어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해석하였다. 손실은 언제나 이득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합리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다루어 온 경제학으로 하여금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는 그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과연 심리학이 경제학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귀추가 기대된다.

37. 문맥상 ㉠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1점]

① 투자 관리는 예술도 과학도 아니고 공학이라는

➡ (X) '직관'이나 '충동'과 관련된 어휘가 없습니다.

"투자 관리는 예술도 과학도 아니다. 그것은 공학이다."
-마코비츠, 포트폴리오 선택(1952)

② 직관은 많은 것을 하지만, 모든 것을 하지는 않는다는

➡ (X) '직관'이라는 어휘가 그대로 쓰였습니다만, '직관'의 유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가치 판단이 드러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가치 판단'이 아니라 '사실', '팩트'입니다.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인간 행동에 대한 사실적 서술이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어구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③ 시장에만 맡겨둔다면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 (X) '시장'을 인간의 '합리성'이나 '충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라고 (마음대로)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을 케인스가 했다고 추론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④ 기업 투자는 이자율보다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 (O) 윗글에 나타난 케인스의 생각에서 핵심어를 찾아보면, '합리성' vs '직관' + '충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 구도가 잘 나타나는 선지가 바로 위의 ④번 선지입니다.

⑤ 과학의 장점은 우리 인간을 미혹으로 이끄는 감정을 배제한다는 것이라는

➡ (X) 감정을 배제한다는 것은 본문에 나타난 케인스의 인간 행동에 대한 생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060938《2006학년도 9평 문항 해설》

날마다 언론에서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경제학에서는 '심리'에 대해 그다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02년에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물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시기에 등장하여 자유방임의 철학에 수정을 가했던 케인스의 경제학이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성찰에 근거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케인스는 인간의 심리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파고들었다기보다, 우리의 의사 결정은 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우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도 파악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인간의 행동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때로는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 그의 생각은 경제학도들 사이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구로 회자되었을지언정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바꾸어 놓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 판단할 때에 '주관적 추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A가 B에 속할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다 A가 B를 얼마나 닮았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거나, ㉡A의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A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거나, 또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자신의 평가를 조정하지만 최종적인 추정 결과는 처음의 평가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주관적 추론은 편리한 인지 방법이지만,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를 낳기 쉽다.

[A]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이들은 합리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비판하는 연구로 나아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득에 관한 의사 결정과 손실에 관한 의사 결정 사이의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위험(risk)'을 기피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위험을 선호하는 비일관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정, 즉 위험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과는 모순된다. 카네만 등은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싫어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해석하였다. 손실은 언제나 이득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합리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다루어 온 경제학으로 하여금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는 그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과연 심리학이 경제학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귀추가 기대된다.

38. ㉡의 구체적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전던지기를 하는데 앞면이 다섯 번 연이어 나왔을 때, 다음에는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 (X)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쉽고 어렵고의 차이에 근거한 판단이 아닙니다.

② 교통사고 소식이 위암으로 인한 사망 소식보다 대중매체에 더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위암으로 사망할 가능성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 (O) 이 선지를 보고, "나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보다 위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지 않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윗글만으로 어떻게 교통사고보다 위암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을 알 수 있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 두 가지의 의문은 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

㉡의 핵심은 '주관적 추론'의 부정확성이 아닙니다. 추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비합리성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위 선지에 대한 판단 포인트는 '때문에'에 있습니다. 매체에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사망 사례)를 떠올리기 쉽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위암으로 인한 것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그 인과 관계의 비합리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 선지는 ㉡의 구체적 사례로 가장 적절합니다.

③ 50달러와 25달러로 나누어 받는 것보다 75달러를 한꺼번에 받는 것을 선호하는 데 반해, 150달러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보다는 100달러를 내고 다음에 50달러를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 (X)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쉽고 어렵고의 차이에 근거한 판단이 아닙니다.

④ '1×2×3×4×5×6×7×8'이라고 칠판에 쓰면서 5초 이내에 답하라고 하였을 때 응답자들이 낸 답의 중앙값은 512였으나, '8×7×6×5×4×3×2×1'이라고 쓴 경우에는 2,250이었다. 정답은 40,320이다.

➡ (X)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쉽고 어렵고의 차이에 근거한 판단이 아닙니다.

⑤ 값이 15달러인 계산기를 구입하는 상황에서 5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20분 더 운전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68%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데 반해, 125달러인 계산기를 구입하는 상황에서는 29%만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 (X)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쉽고 어렵고의 차이에 근거한 판단이 아닙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060939《2006학년도 9평 문항 해설》

날마다 언론에서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경제학에서는 '심리'에 대해 그다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02년에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물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시기에 등장하여 자유방임의 철학에 수정을 가했던 케인스의 경제학이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성찰에 근거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케인스는 인간의 심리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파고들었다기보다, 우리의 의사 결정은 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우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도 파악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인간의 행동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때로는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 그의 생각은 경제학도들 사이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구로 회자되었을지언정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바꾸어 놓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 판단할 때에 '주관적 추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A가 B에 속할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다 A가 B를 얼마나 닮았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거나, ㉡A의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A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거나, 또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자신의 평가를 조정하지만 최종적인 추정 결과는 처음의 평가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주관적 추론은 편리한 인지 방법이지만,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를 낳기 쉽다.

[A]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이들은 합리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비판하는 연구로 나아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득에 관한 의사 결정과 손실에 관한 의사 결정 사이의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위험(risk)'을 기피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위험을 선호하는 비일관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정, 즉 위험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과는 모순된다. 카네만 등은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싫어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해석하였다. 손실은 언제나 이득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합리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다루어 온 경제학으로 하여금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는 그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과연 심리학이 경제학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귀추가 기대된다.

39. [A]와 관련지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피실험자들에게 4,000달러를 벌 확률이 80%이고 한 푼도 못 얻을 가능성이 20%인 경우와, 100%의 가능성으로 3,000달러를 버는 경우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었다. 앞의 것을 선택할 경우에 수학적 기댓값(3,200달러)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실험자의 80%가 확실하게 3,000달러를 버는 쪽을 선택하였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을 기피한 것이다.

다음으로, 4,000달러를 잃을 확률이 80%이고 한 푼도 잃지 않을 가능성이 20%인 경우와, 100%의 확률로 3,000달러를 잃는 경우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물었다. 이 실험에서는 92%의 응답자가 손실의 기댓값이 더 큰 도박 쪽을 택했다. 이번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험을 선호한 것이다.

① 경제학에서는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을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것 같군.

➡ (X) 윗글에서 위험에 관한 합리성의 판단 기준은 '태도의 일관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선호 또는 기피라는 태도 그 자체만으로는 비합리적임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②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실험 결과이군.

➡ (O) 윗글에서 언급했듯이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비일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③ 경제학적 합리성에는 위배될지라도 사람들은 그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군.

➡ (O) <보기>에 나타난 사람들의 행동은 경제학적으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태도의 비일관성), 손실을 회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손실 기댓값이 더 크고 위험하더라도 선택을 강행하는, 손실 회피의 측면에서는 나름의 일관성이 발견됩니다.

④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은 기대되는 이익이 조금 적더라도 확실한 쪽을 더 낫다고 생각하는군.

➡ (O) <보기>에서 100%로 3000$를 얻게 되는 선택을 한 사람들은, 위험한 선택에 비해 기대되는 이익(기댓값)이 200$ 더 적더라도 안전한 쪽을 택했습니다.

⑤ 경제학에서는 실현될 수 있는 결과 값이 기댓값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가지고 위험을 측정하는군.

➡ (O) <보기>에서 위험하다고 서술된 선택은 기댓값과 결과 값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안전하다고 서술된 선택은 기댓값과 결과 값이 동일했습니다. 즉, 경제학에서는 두 값의 거리가 곧 위험도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061152《2006학년도 수능 문항 해설》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흉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즉,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 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쉽다.

[A] 가령,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여기서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의 수익이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 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 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옵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옵션은 보유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진 경영자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을 많이 하락시킬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옵션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주와 경영자의 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

5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주식 옵션은 매매될 수 없다.

➡ (X)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주식 옵션)을 샀다고 했으므로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아요. 주식 옵션을 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하므로, 본문에서 '샀다'는 말만 나타나도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매매: 물건을 팔고 사는 일.

② 옵션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권리는 아니다.

➡ (O)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옵션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③ 옵션의 행사 가격은 행사 시기에 가서 정해진다.

➡ (X) 옵션의 행사 가격은 옵션이 매매되는 시점에 이미 정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④ 주식 이외의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옵션은 없다.

➡ (X) 윗글에서 '옵션'은 '금융 상품'의 하나라고 했고, '기초 자산'은 어떤 상품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반드시 주식이어야 한다는 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옵션'이 있다는 본문의 문장을 살펴보면, 기초 자산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고, 그 중 하나가 주식 옵션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⑤ 옵션 프리미엄은 옵션을 행사한 후에 얻게 되는 이득이다.

➡ (X) 미래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행사한 후에 얻게 되는 이득을 지칭하는 용어는 별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061153《2006학년도 수능 문항 해설》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흉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즉,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 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쉽다.

[A] 가령,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여기서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의 수익이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 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 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옵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옵션은 보유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진 경영자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을 많이 하락시킬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옵션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주와 경영자의 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

53.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압착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 (X) 적절한 추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압착기를 빌리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 (X) 적절한 추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압착기를 빌리기는 더 쉬워질 겁니다.

③ 압착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 (X) 적절한 추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압착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겁니다.

④ 압착기 임대 계약금을 돌려받기 쉬워지기 때문에
➡ (X) 적절한 추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글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옵션은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으로 보입니다.

⑤ 압착기의 임대료가 계약한 수준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 (O) 윗글에서 기하학의 아버지 탈레스가 기하학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떻게 돈을 버셨는지 파악해봅시다(농담입니다). 탈레스가 이윤을 남기려면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가 수확기의 임대료보다 낮아야 합니다.

> 수확기 임대료 - 계약 임대료 = 이윤!
> (단, 수확기 임대료 > 계약 임대료)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이 되려면 올리브 농사가 풍작이어야 합니다. 풍작이면 압착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짐) 가격이(임대료가) 상승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흉작이면 어떻게 될까요? 흉작이면 압착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빌리려는 사람이 적어짐) 가격이(임대료가) 하락한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확기의 임대료가 계약한 임대료보다 더 낮게 형성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옵션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가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 수확기 임대료가 100₩인데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가 200₩이었다고 생각해봅시다. 200₩에 빌려서 시장에서 다시 100₩에 빌려주면 한 대를 빌려줄 때마다 100₩씩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옵션 프리미엄이 얼마였든간에 옵션을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옵션 프리미엄만큼 손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옵션을 행사하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므로,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061154《2006학년도 수능 문항 해설》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흉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즉,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 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쉽다.

[A] 가령,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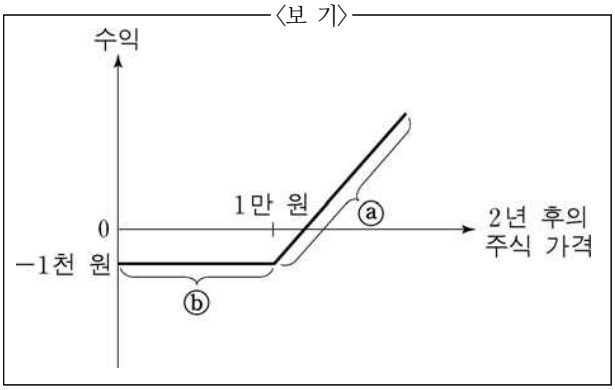
여기서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의 수익이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 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 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옵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옵션은 보유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진 경영자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을 많이 하락시킬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옵션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주와 경영자의 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54. [A]에서 2년 후의 상황을 〈보기〉의 그래프로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는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여 준다.

➡ (O) [A]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래프상으로 주식 가격이 1만원을 넘어선 순간부터(ⓐ구간) 수익이 -1000₩에서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의 일부는 분명 수익이 음수값(-)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왜 본문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구간에서 음수값이 나타나는 구간은 주식 가격이 10000₩ ~ 11000₩인 구간입니다.

<주식 가격이 11,000₩인 경우의 시뮬레이션>
주식 옵션을 행사해서 10,000₩에 사서 (-10,000₩)
주식 시장에 갖다팔면 11,000₩을 얻고 (+11,000₩)
주식 옵션의 프리미엄인 1,000₩을 빼면 (-1000₩)
결국 남는 것은 0₩!

만약 주식 가격이 1만₩이 넘은 순간부터, 그래프상에서 수익이 0이 되는 지점인, 주식 가격이 1만1천₩이 되는 시점까지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손실이 조금이나마 감소되지 않고 꾸준히 -1000₩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즉 주식 가격이 10001₩인 경우, 옵션을 행사하면 1₩의 차익을 얻어 이미 지불한 비용인 옵션 프리미엄 -1000₩의 손실을 -999₩로 줄일 수 있었기에 그래프가 조금씩이나마 우상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식 가격이 10,000₩보다 단 1₩이라도 높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는 주식 가격이 아무리 낮아져도 손실은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O) 윗글에 나타나듯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더라도 옵션만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옵션 프리미엄인 -1000₩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③ ⓑ의 모양이 수평인 것은 구입한 주식 옵션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 (X)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포기했기 때문에 손실이 일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식 가격이 10,000₩보다 낮은 상황에서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주식 가격이 하락한 만큼 추가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식 가격이 9,000₩이라면, 옵션을 행사할 경우 -1,000₩의 손실이 발생하고(계약 금액은 10,000₩이었으므로 주식을 10,000₩에 사서 9,000₩에 되파는 삽질), 여기에 옵션 프리미엄 비용이 있었으니 -1,000₩이 가산되므로 손실이 -2,000₩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④ ⓑ가 세로축의 0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것은 옵션 프리미엄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O) ⓑ구간은 주식 가격이 10,000₩보다 낮아서 옵션을 포기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주식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든 손실이 -1,000₩으로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옵션 프리미엄이 1,000₩이었기 때문입니다.

⑤ ⓐ와 ⓑ의 모양이 다른 것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O) ⓐ의 모양이 우상향인 것은 옵션 보유자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이고, ⓑ의 모양이 수평인 것은 옵션 보유자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옵션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수익의 비대칭성, 즉 손실의 최댓값은 옵션 프리미엄의 크기만큼으로 일정하지만, 수익은 주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비례하여 상승하는 옵션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061155《2006학년도 수능 문항 해설》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흉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즉,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 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쉽다.

[A] 가령,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여기서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의 수익이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 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 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옵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옵션은 보유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진 경영자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을 많이 하락시킬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옵션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주와 경영자의 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

55. ㉡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경영자가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추구하도록
➡ (X) 윗글에 노동자들의 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② 경영자가 주식 가격의 상승을 추구하도록
➡ (O) 경영자가 주식 옵션을 갖게 된다면, 경영자의 수익은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주식 가격이 옵션에 계약된 가격보다 상승한다면, 상승한 차액만큼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경영자는 주식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경영자가 주식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면, 결국 회사의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③ 경영자가 덜 위험한 사업을 선택하도록
➡ (X) 윗글에서 설명하듯 주식 옵션을 지급하게 되면 경영자는 더욱 공격적인 경영활동, 주식 가격의 하락 위험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경영자가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하도록
➡ (X) 윗글에 사업의 다각화, 즉 다양한 방면으로의 사업 전개와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⑤ 경영자가 사회 공익을 추구하도록
➡ (X) 윗글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080619《2008학년도 6평 문항 해설》

테니스 선수 그라프는 1992년에 우승을 통해 거액을 벌었지만, 유독 숙적인 셀레스에게는 계속해서 패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셀레스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라프는 경기 능력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승률이 거의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승 상금은 물론 광고 출연 등의 부수적 이익 또한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위치적 외부성'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한 사람의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외부성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킨다. 그라프의 사례는 경쟁자의 성과에 의해 자신의 위치적 보상이 크게 상승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예컨대 한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 이는 다른 경쟁자들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른 경쟁자들 또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쟁자가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반복적으로 늘린다면, 경쟁자 간의 실질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인 성과에 따른 각 경쟁자의 위치적 보상 정도가 클수록 이와 같은 투자의 유인은 커진다.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린다. 그러나 경쟁자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의 결과 각자의 위치에 별 효과가 없다면 소모적인 지출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투자 행태를 군비 경쟁에 비유하여 ㉡ '위치적 군비 경쟁'이라고 부른다. 위치적 군비 경쟁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이는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다소간 기여할 수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고 더 이상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투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더구나 개인 간에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사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쟁을 자제시키는 사회적 규범이 생겨나거나 경쟁을 제약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기도 한다.

19.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1점]

① 위치적 외부성은 비슷한 수준의 경쟁자 사이에서 크게 작용한다.

➡ (O)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한다는 것은,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의해 자신의 상대적 위치가 변화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상대적 위치와 관련성이 높은 경쟁자, 즉 자신과 순위가 비슷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할 것을 추론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1~2위를 다투는 최상위권 야구팀은 만년 꼴찌인 야구팀이 겨울 전지훈련을 하와이로 가든 뉴욕으로 가든 아무 신경이 쓰이지 않을 겁니다. 반면 올해 준우승팀이 모기업의 지원 아래 겨울 전지훈련을 LA로 가서 메이저리그 팀과 함께 훈련을 하기로 했다면, 올해 우승팀은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쿠바 대표팀을 초청하든가, 다른 메이저리그 팀과 협력을 추진하든가 해서 경쟁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왕좌를 지킬 수 있겠죠.

② 위치적 외부성이 나타나면 경쟁자의 비용 지출이 수반될 수 있다.

➡ (O) 각자의 상대적 성과에 따라 상대적 위치가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누군가 투자를 늘리면 경쟁자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위가 하락하고, 하락한 순위(상대적 위치)는 위치적 보상의 하락을 불러오기 때문이지요.

③ 위치적 보상은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의 차이가 클수록 증가한다.

➡ (X) 위치적 보상은 경쟁자의 성과와 자신의 성과에 따른 상대적 위치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경제적 비효율성'입니다.

*유인: 어떤 일 또는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경제적) 유인: 사람들의 행동이나 선택을 유도하거나 바꿀 수 있게 하는 요인.

※ 경제 관련 글에 나타난 '유인'은 '경제적 유인'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④ 위치적 군비 경쟁의 비효율성을 인식하면 사회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 (O) 사회적 규범이나 사회적 협약은 사회적 해결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⑤ 위치적 외부성으로 인한 경쟁의 결과가 경쟁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 (O) 경쟁의 결과, 경쟁자들 간의 순위가 변화했다면 상대적 위치가 상승한 사람은 이익이 되겠지만 하락한 사람은 손해일 것입니다. 만약 경쟁자들 간의 순위가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경쟁을 위한 지출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080620《2008학년도 6평 문항 해설》

테니스 선수 그라프는 1992년에 우승을 통해 거액을 벌었지만, 유독 숙적인 셀레스에게는 계속해서 패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셀레스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라프는 경기 능력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승률이 거의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승 상금은 물론 광고 출연 등의 부수적 이익 또한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위치적 외부성'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한 사람의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외부성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킨다. 그라프의 사례는 경쟁자의 성과에 의해 자신의 위치적 보상이 크게 상승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예컨대 한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 이는 다른 경쟁자들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른 경쟁자들 또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쟁자가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반복적으로 늘린다면, 경쟁자 간의 실질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인 성과에 따른 각 경쟁자의 위치적 보상 정도가 클수록 이와 같은 투자의 유인은 커진다.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린다. 그러나 경쟁자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의 결과 각자의 위치에 별 효과가 없다면 소모적인 지출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투자 행태를 군비 경쟁에 비유하여 ㉡ '위치적 군비 경쟁'이라고 부른다. 위치적 군비 경쟁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이는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다소간 기여할 수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고 더 이상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투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더구나 개인 간에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사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쟁을 자제시키는 사회적 규범이 생겨나거나 경쟁을 제약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기도 한다.

20. ㉠이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사퇴가 나머지 후보들의 당선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O)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경쟁자)들 중 1명만 당선이 되는 것을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후보가 '사퇴'라는 성과를 보인다면, 나머지 후보들의 당선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특정 후보(경쟁자A)의 상대적 성과에 의해 다른 후보(경쟁자B)의 위치적 보상이 영향을 받는 위치적 외부성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프로 경기 식전 행사에서 유명 가수가 공연하면 관중이 크게 늘어 참가 선수들이 출전 수당을 더욱 많이 받게 된다.

➡ (X) 유명 가수와 참가 선수들은 서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 만약 유명 가수에게 그 어떤 비용도 지불된 바가 없다면, 또는 비용이 지불되었더라도 그 비용을 어떤 식으로든 참가 선수들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면, 외부성 현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③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좋은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열기 전에 줄을 길게 서기도 한다.

➡ (O)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경쟁자입니다. 모두들 좋은 좌석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누가 먼저 줄을 서느냐(상대적 성과)에 따라 좌석(위치적 보상)이 결정됩니다. 이는 위치적 외부성이 나타난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④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이 다른 학생들보다 한두 해 늦게 입학하면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의 취학을 미루려고 한다.

➡ (O) 서로 취학을 미루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학업 성취도'라는 성과를 얻기 위한 학부모들 간의 경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위치적 외부성이 나타난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시야말로 위치적 외부성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줄을 세우는 시험에서의 위치적 외부성은 필연적입니다.

⑤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모두가 남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알아듣기가 더욱 힘들게 된다.

➡ (O) 많은 사람들이 (A-B, C-D, E-F, G-H …) 동시에 말을 하고 있으면, 더 크게 말을 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의사소통이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키우는 이런 상황은 위치적 외부성이 나타나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080621《2008학년도 6평 문항 해설》

테니스 선수 그라프는 1992년에 우승을 통해 거액을 벌었지만, 유독 숙적인 셀레스에게는 계속해서 패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셀레스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라프는 경기 능력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승률이 거의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승 상금은 물론 광고 출연 등의 부수적 이익 또한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위치적 외부성'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한 사람의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외부성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킨다. 그라프의 사례는 경쟁자의 성과에 의해 자신의 위치적 보상이 크게 상승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예컨대 한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 이는 다른 경쟁자들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른 경쟁자들 또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쟁자가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반복적으로 늘린다면, 경쟁자 간의 실질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인 성과에 따른 각 경쟁자의 위치적 보상 정도가 클수록 이와 같은 투자의 유인은 커진다.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린다. 그러나 경쟁자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의 결과 각자의 위치에 별 효과가 없다면 소모적인 지출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투자 행태를 군비 경쟁에 비유하여 ㉡ '위치적 군비 경쟁'이라고 부른다. 위치적 군비 경쟁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이는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다소간 기여할 수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고 더 이상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투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더구나 개인 간에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사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쟁을 자제시키는 사회적 규범이 생겨나거나 경쟁을 제약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기도 한다.

21. ㉡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다른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 (X) 다른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면,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 경쟁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지출 수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어야만 위치적 외부성 및 위치적 군비 경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ㄴ. 집단 내 경쟁자들의 이익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 (O) 집단 내 경쟁자들의 이익의 합이 일정할 때, 위치적 군비 경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등, 2등, 3등…에 대한 보상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ㄷ.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의 효력이 강하다.

➡ (X)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의 효력이 강하면, 과도한 경쟁이 차단됩니다.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행위가 예방되는 것입니다. 이는 위치적 군비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ㄹ. 경쟁자들은 위치적 보상이 성과 향상을 위한 지출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한다.

➡ (O) 위치적 군비 경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위치적 보상(편익)이 지출(투자 비용)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출(투자 비용)이 위치적 보상(편익)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손해를 보는 셈인데, 그런 전제 하에서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081144《2008학년도 수능 문항 해설》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을 곱한 11억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불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 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공공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위 글의 글쓴이가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장 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 (X) 이 글에서 시장 이자율은 사회적 할인율을 바람직하게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하나의 주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글의 핵심은 아닙니다.

② 자본 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 (X) 사회적 할인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나타납니다만, 자본 시장(대출과 저축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미래 세대를 어떻게 배려할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③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X)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끼치는 영향은 이 글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④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 (O) 윗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문단: 사업 타당성 진단에 활용되는, 할인율의 개념

2문단: 공공사업의 타당성 진단에 활용되는 사회적 할인율

3문단: 사회적 할인율을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 수익률로 간주하자는 주장의 근거와 요지

4문단: 사회적 할인율을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 수익률로 간주할 수 없는 이유 및 바람직한 사회적 할인율 책정의 방향.

종합하면, 윗글은 사회적 할인율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장의 논리를 비판하며, 사회적 할인율은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글입니다.

⑤ 공공 부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가?

➡ (X) 공공 부분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이 글에 나타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081145《2008학년도 수능 문항 해설》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을 곱한 11억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불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 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5. ㉠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① 민간 투자도 공익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X) 민간 투자가 공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②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X) 선도한다는 것은 앞장서서 이끌거나 안내한다는 것인데, ㉠의 내용은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는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같은 부문에 함께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각자의 투자 영역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③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는 동등한 투자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 (X) ㉠은 오히려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이라면 정부는 투자를 철회하는 것이 낫다는 듯한 뉘앙스의 문장입니다. 동등한 투자 기회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④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X) 수익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좀 된다 싶은 공공 부문의 사업이라면, 민간이 알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정부는 손을 떼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중에서도 수익률이 낮아 민간이 투자하지 않는 부문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의 주장입니다.

⑤ 정부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을 보완해야 한다.

➡ (O) ㉠의 내용을 쪼개어 보겠습니다.

1.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으로 볼 수 있다.
2. 민간 투자가 가능한 공공 부문은 정부의 투자 필요성이 작다.

이를 통해 읽어낼 수 있는 내용은, '3. 정부의 투자는 낮은 수익률로 민간 투자가 어려운 공공 부문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081146《2008학년도 수능 문항 해설》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을 곱한 11억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불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 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공공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6. 위 글로 보아 〈보기〉의 ⓐ에 대한 판단으로 타당한 것은? [3점]

〈보 기〉

한 개발 업체가 어느 지역의 자연 환경을 개발하여 놀이 동산을 건설하려고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연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놀이동산의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리어 있다. 그래서 개발 업체와 지역 주민들은 ⓐ놀이동산으로부터 장기간 파급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계산해 보기로 하였다.

①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X)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생각되면, 놀이동산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이들은 놀이동산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팍팍 깎아내릴 것입니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깎이는 양이 적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점에서 세일할 때 할인율이 높으면 물건 값을 많이 깎아주지 않습니까? 할인율이 낮으면 물건 값을 적게 깎아주는 것이고요. 사업 타당성도 똑같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사업은 높은 할인율로 후려쳐서 낮은 현재 가치를 매기게 되고, 그럴듯한 사업은 낮은 할인율로 조금만 깎아서 높은 가치를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②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O) 자연 환경의 가치를 중시한다면 자연 개발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들은 놀이동산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팍팍 깎아내릴 것입니다.

③ 개발 업체는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X) 개발 업체는 사업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할 것이므로(당위성 확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겠죠. 자기 사업의 현재 가치를 자기가 후려칠, 너무나 겸허한 사업자는...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겁니다.

④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X) 소득 증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놀이동산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죠. 이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사업의 현재 가치를 크게 깎아내리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되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X)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사업의 현재 가치를 대폭 깎으려 할 것입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090643《2009학년도 6평 문항 해설》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재정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데 조세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공평 과세, 즉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조세를 부과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특정 조세에 대한 납부자를 결정하게 되면 조세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를 '조세전가(租稅轉嫁)'라고 한다.

[A] 정부가 볼펜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세금 부과 전에 자루당 1,500원에 100만 자루가 거래되고 있었다면 생산자는 총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갖게 되므로 가격을 100원 더 올리려고 한다. 생산자가 불만을 갖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즉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루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한편, 조세전가가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자루당 1,500원을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1,6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불만이 시장에 반영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하락 폭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즉 정부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해도 생산자에게 조세가 전가된다.

그렇다면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하든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상승 요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새로운 가격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즉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하락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전가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43. '조세전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조세 부담 비중이 달라진다.

➡ (O) 윗글에서는 가격의 변화에 대응하여 구입량이나 생산량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차이에 따라 조세 부담 비중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구입량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적은 소비자는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많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생산량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적은 생산자는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많을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②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조세전가의 혜택을 누린다.

➡ (X) 조세전가의 혜택은 하나의 주체만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과된 조세를 타인에게 전가하게 된다면, 자신은 혜택을 누리는 셈이지만 타인은 부담을 떠안은 셈이 되므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③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물품세의 단위당 조세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 (X) 윗글에서 물품세의 단위당 조세액은 조세 부과 단계에서 결정되는 고정값으로 나타납니다. 조세전가 현상은 정부의 조세 부과 이후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따라서 선후관계도 맞지 않고, 조세액이 바뀐다는 서술도 맞지 않습니다.

④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과될 경우 결국 소비자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 (X) 실질적인 세금 부담 비율은 두 경제 주체가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비자가 세금을 전액 실질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시장 가격 상승에도 소비량을 전혀 줄일 수 없는 소비자인 경우), 위의 서술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⑤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상실된다.

➡ (X) 조세전가는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에 의해 실현됩니다.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상실된다면, 조세전가도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090644《2009학년도 6평 문항 해설》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재정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데 조세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공평 과세, 즉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조세를 부과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특정 조세에 대한 납부자를 결정하게 되면 조세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를 '조세전가(租稅轉嫁)'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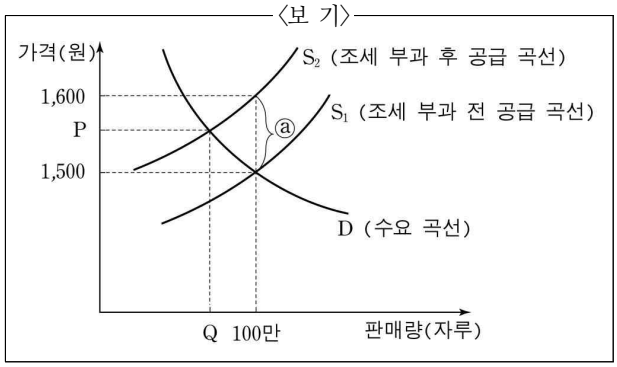
[A] 정부가 볼펜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세금 부과 전에 자루당 1,500원에 100만 자루가 거래되고 있었다면 생산자는 총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갖게 되므로 가격을 100원 더 올리려고 한다. 생산자가 불만을 갖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즉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루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한편, 조세전가가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자루당 1,500원을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1,6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불만이 시장에 반영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하락 폭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즉 정부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해도 생산자에게 조세가 전가된다.

그렇다면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하든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상승 요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새로운 가격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즉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하락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전가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44. [A]를 〈보기〉와 같이 그래프로 그렸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조세 부과 후 소비자는 P를 자루당 가격으로 지불한다.

➡ (O) 조세 부과 후 공급 곡선이 S1에서 S2로 이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 곡선인 D가 공급 곡선 S와 만나는 교점의 가격은 1,500원이 아닌 P원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P를 자루당 가격으로 지불하고, 생산자는 P를 자루당 가격으로 받게 됩니다.

② 조세 부과 후 생산자는 ⓐ를 자루당 조세액으로 납부한다.

➡ (O) [A]에서 세금의 납부자는 '생산자'입니다.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적절한 선지입니다. 물론 100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상승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도 일부 금액을 납부한 셈이 됩니다. 그러나 위 선지의 포인트는 정부에 최종 '납부'하는 사람이 얼마를 납부하느냐이므로 '생산자'가 '100'원을 '납부'한다는 서술은 적절한 서술입니다.

③ 조세를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이면 공급 곡선 S1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 (X) S1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S2가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겠습니다. S1은 조세가 부과되기 '전'입니다.

④ 소비자의 자루당 세금 부담액은 P에서 1,500원을 뺀 것이다.

➡ (O)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1500원이었던 볼펜이,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가격이 P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P-1500원만큼 소비자는 세금을 전가받은 셈입니다.

⑤ 조세 부과로 판매량이 100만 자루에서 Q로 줄어들게 된다.

➡ (O) [A]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보기> 그래프 상의 S2와 D의 교점은(Q, P) 100만자루보다 0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090645《2009학년도 6평 문항 해설》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재정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데 조세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공평 과세, 즉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조세를 부과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특정 조세에 대한 납부자를 결정하게 되면 조세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를 '조세전가(租稅轉嫁)'라고 한다.

[A] 정부가 볼펜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세금 부과 전에 자루당 1,500원에 100만 자루가 거래되고 있었다면 생산자는 총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갖게 되므로 가격을 100원 더 올리려고 한다. 생산자가 불만을 갖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즉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루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한편, 조세전가가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자루당 1,500원을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1,6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불만이 시장에 반영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하락 폭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즉 정부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해도 생산자에게 조세가 전가된다.

그렇다면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하든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상승 요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새로운 가격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즉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하락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전가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45. ㉠,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바나나 가격이 오르면 곧 오렌지를 구매하는 소비자

➡ (X) 바나나 가격이 오르면(가격 변화) 곧 오렌지를 구매하는(바나나 구입량 크게 변화) 소비자이므로 ㉠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② ㉠ :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구입을 쉽게 줄이는 소비자

➡ (X) 커피 가격이 오르면(가격 변화) 커피 구입을 쉽게 줄이는(커피 구입량 크게 변화) 소비자이므로 ㉠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③ ㉠ : 상표와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샴푸를 구매하는 소비자

➡ (X) 상표와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샴푸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다른 것에 구애되지 않고 오직 가격의 변화에 따라 구입량이 크게 변화하는 소비자이므로 ㉠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④ ㉡ : 사과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한 농장주

➡ (X) 사과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시장에 내놓는 생산량을 크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높으면 창고에서 대량으로 출하하고, 시장 가격이 낮으면 창고 문을 닫아 두는 것이죠. 이런 농장주는 가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⑤ ㉡ : 유행이 바뀌어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액세서리 생산자

➡ (O) 유행이 바뀌어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액세서리의 시장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생산량을 줄일 수 없습니다.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데, 가격이 낮아지니까 매대에서 거둬서 다시 재고로 쌓아둔다?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데 재고를 유지한다? 말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의 처분세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101120《2010학년도 수능 문항 해설》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와 40%인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폐해를 가려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에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관건이다. 예컨대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획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 결합인지를 규명하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획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해 대체재,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나 불가피성에 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비로소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0. 위 글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는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 (X)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윗글의 핵심입니다.

② 기업 결합으로 얻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X) 기업 결합으로 얻은 이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③ 기업 결합을 통한 기업의 확장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X) 국제 경쟁력 강화는 분명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 글은 정부가 기업의 결합 과정을 어떻게 심사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심사하고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④ 기업 활동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는 소비자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 (X) 기업 활동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소비자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은 윗글로부터 추론해내기 어렵습니다. 윗글에 소개된 기업 활동은 다양한 기업 활동 중 기업 결합 하나일 뿐이고, 그러한 기업 결합의 위법성 여부조차도 정부가 판단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⑤ 기업 결합의 순기능을 살리되 그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신중히 가려내야 한다.

➡ (O) 첫 문단의 내용은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정부의 구체적인 판단 과정입니다. 따라서 윗글의 취지*는 위 선지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지: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목적이나 긴요한 뜻.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101121《2010학년도 수능 문항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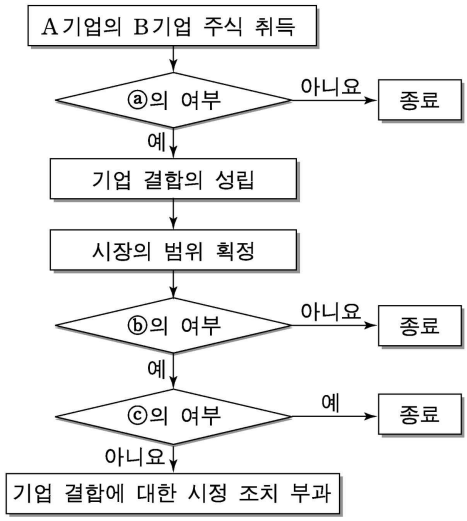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와 40%인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폐해를 가려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에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관건이다. 예컨대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획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 결합인지를 규명하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획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해 대체재,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나 불가피성에 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비로소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1. 위 글에 나타난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3점]



➡ 위 도표에서 가장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주식 취득에 의한 ⓐ의 여부 판단입니다.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으니, A가 B를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했는지를 판단해야 하겠죠? 이때 지배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면, 기업 결합 자체가 성리합지 않으므로 결합 심사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음으로 ⓑ의 여부 판단입니다. 지문에서는 시장의 범위 획정 이후 경쟁 제한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경쟁 제한이 없다면 기업 심사는 종료되고 기업 결합은 합법적인 것으로 판명됩니다.

마지막으로 ⓒ의 여부 판단입니다. 위 도표에서는 최종적으로 ⓒ의 여부 판단에 의해 심사가 종료되거나 시정조치가 부과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지문에 의하면 이는 취득 기업 측의 항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과정입니다. 이때 항변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결합 심사는 종료되고, 해당 기업의 결합은 합법적인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만약 항변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시정조치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시정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에 방문해보시면 기업결합법 관련 탭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 예) 당해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	ⓑ	ⓒ
①	A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대체제 존재	경쟁 제한
②	A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항변의 타당성	경쟁 제한
③	B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경쟁 제한	항변의 타당성
④	B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대체제 존재	항변의 타당성
⑤	B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항변의 타당성	경쟁 제한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101122《2010학년도 수능 문항 해설》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와 40%인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폐해를 가려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에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관건이다. 예컨대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획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 결합인지를 규명하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획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해 대체재,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나 불가피성에 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비로소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2. 〈보기〉는 어느 지역의 4가지 음료수 A~D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반응은?

〈보 기〉

판매량 / 가격인상	A의 판매량	B의 판매량	C의 판매량	D의 판매량
A 가격 10% 인상	20% ↓	15% ↑	5% ↑	변화 없음
B 가격 10% 인상	15% ↑	20% ↓	3% ↑	2% ↑
C 가격 10% 인상	3% ↑	2% ↑	20% ↓	15% ↑

※ 이 지역에는 4개의 회사만이 각각 한 종류의 음료수를 생산하며, 이들 회사는 다른 음료수를 생산할 수 없다. **(↑: 증가, ↓: 감소)**

① A의 소비자들은 B보다 C를 대체재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는군.

➡ (X) A의 가격이 올랐을 때, A의 판매량은 20% 줄어든 반면 B는 15%가 증가하고 C는 5%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A를 구매하던 소비자들이 A의 가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B나 C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B의 판매량 증가는 C보다 3배나 큰 것으로 A 소비자들은 C보다 B를 대체제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② B와 동일 시장으로 획정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품은 A이군.

➡ (O) A의 가격이 높아졌을 때 B의 수요량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고, B의 가격이 높아졌을 때는 A의 수요량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서로의 가격 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높은 두 상품은 서로에 대해 대체제일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바탕으로 할 때 A와 B는 동일 시장 내의 경쟁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C의 가격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상품은 B이군.

➡ (X) C의 가격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상품은 15%가 증가한 D입니다.

④ A 생산 회사와 D 생산 회사가 결합한다면 수평 결합으로 볼 가능성이 크군.

➡ (X) A와 D는 대체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와 D를 생산하는 회사는 경쟁자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수평 결합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 C 생산 회사와 D 생산 회사가 결합한다면 혼합 결합으로 볼 가능성이 크군.

➡ (X) C와 D는 대체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관계인 만큼 수평 결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101123《2010학년도 수능 문항 해설》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와 40%인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폐해를 가려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에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관건이다. 예컨대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획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 결합인지를 규명하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획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해 대체재,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나 불가피성에 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비로소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3. ㉠~㉤의 사전적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① ㉠ : 사라져 없어지게 함.
➡ (X) 침해: 침범하여 해를 끼침.

② ㉡ :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
➡ (O)

③ ㉢ : 폐단으로 생기는 해.
➡ (O)

④ ㉣ : 어떤 사물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
➡ (O)

⑤ ㉤ :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함.
➡ (O)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 한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J커브의 형태가 보여 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

한편,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 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한다.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이 선호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환율 :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
* 경상 수지 : 상품(재화와 서비스 포함)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클 때는 흑자, 작을 때는 적자로 구분함.

28. 위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① 환율 상승에 따르는 수입 상품의 가격 변화
➡ (O)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② 경상 수지 개선을 위한 고환율 정책의 필연성
➡ (X) 지문에 환율 상승(고환율)에 따른 경상 수지 개선은 필연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고환율 정책의 필연성은 윗글에서 다룬 내용으로 볼 수 업습니다.

③ 가격 변화에 대한 외국 소비자의 지체된 반응
➡ (O) 지문에서는 수출 상품의 가격 변화에 대해 외국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는 반응을 보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이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반응은 '지체된'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④ 국내외 수요 구조가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
➡ (O) 국내외의 수요 구조란 국내외의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지문에서는 이러한 수요 구조에 따라, 환율이 올랐을 때 경상 수지가 개선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⑤ 환율 상승이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 (O) 첫 문단의 첫 문장에 나타납니다. 의외로 첫 문단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부분이 첫 문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문제를 풀면서 위 선지에 대한 근거를 즉각 떠올리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의식적으로 첫 문단을 조금 더 세심하게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 한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J커브의 형태가 보여 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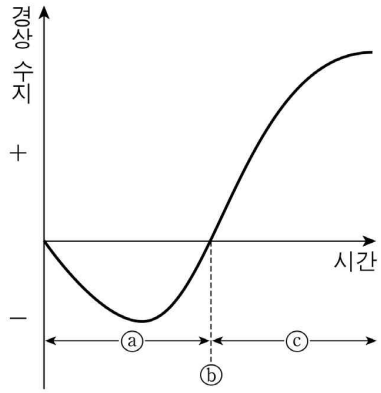
한편,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 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한다.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이 선호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환율 :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
* 경상 수지 : 상품(재화와 서비스 포함)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클 때는 흑자, 작을 때는 적자로 구분함.

2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J커브 그래프를 해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수입 상품 가격의 상승 비율이 환율 상승 비율에 가까울수록 ⓐ의 골이 얕아진다.

➡ (O) 지문에는 수입 상품 가격의 상승 비율이 환율의 상승 비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경상 수지가 악화(-)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상품의 가격 상승 비율이 환율 상승 비율에 가까워진다면,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수준이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곧 ⓐ의 골(-)이 얕아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ㄴ. 수출 기업의 품질 및 원가 경쟁력이 강화될수록 ⓐ 구간이 넓어진다.

➡ (X) 지문에서 수출 기업의 '품질'과 '경쟁력'을 언급한 부분은 J커브 현상과는 다른 장기적인 경우입니다. 위의 ⓐ구간은 단기적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J커브 현상의 것이므로 적절한 해석이 아닙니다.

ㄷ. ⓑ를 기점으로 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 (X) ⓑ는 경상 수지가 개선되는 시점, 즉 가격과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합니다. 환율은 지문에 나타나듯 그래프상의 원점에서부터 이미 상승해 있는 상태로 이해해야 합니다.

ㄹ. ⓒ는 환율 상승을 통해 경상 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 (O) 환율이 오르기 전에는 경상 수지가 0이었고,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값이었다가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환율 상승 전(0)보다 경상 수지가 개선되는 것은 경상 수지가 +값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110930《2011학년도 9평 문항 해설》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 한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J커브의 형태가 보여 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

한편,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 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한다.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이 선호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환율 :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
* 경상 수지 : 상품(재화와 서비스 포함)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클 때는 흑자, 작을 때는 적자로 구분함.

3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외 상품의 수요 구조에 따라 수출 상품의 가격 조정이 선행될 수 있다.

➡ (X) 상품의 가격 조정이 선행되더라도,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②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국내외 기업은 환율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관찰한 후 가격을 조정한다.

➡ (X) 상품의 가격 조정이 선행되더라도,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관찰한 후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수요 구조입니다.

③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

➡ (O) 윗글에서는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가 수요 구조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수요 구조인 경우, 경상 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고 추론한 위 선지가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합니다.

④ 가격의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국내외 상품 수요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X)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건은 윗글에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⑤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는 경상 수지의 개선 여부와는 무관하다.

➡ (X) 수요 구조가 경상 수지의 개선 및 악화와 관련이 있다고 윗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더 읽어볼 이야기》

[Q] 지문을 보면, 환율이 상승 후에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국내외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면 경상 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A] 먼저, 이 글에는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만, 한 가지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 수지는 미화($)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출량도 $, 수입량도 $로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각각 1$짜리 약과와 초콜릿을 100개씩 수출하고 수입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환율은 1$에 100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게 수출과 수입의 전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상 수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도표1] - 환율 상승 전의 상황

개당 가격	수입량 / 수출량	수입액 / 수출액
초콜릿: 1$ (원화1000₩)	수입량 100개	수입액 **100$**
약과: 1$	수출량 100개	수출액 **100$**

[도표1]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빼니 0$네요. 환율이 1$에 1000₩일 때 경상 수지는 0입니다. 무역 적자도 흑자도 아닌 상황이네요.

그런데 환율이 올라서 1$에 1300₩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품의 가격이 조정되겠죠? 초콜릿은 1$에 수입하면 환율이 1300원에 1$니까 1300₩은 받아야 외국에 1$를 지불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약과는 한국에서는 여전히 1000₩에 판매되겠지만, 환율이 올랐으니까 0.8$에 팔아도 1040₩으로 바꿀 수 있어 이익입니다. (0.8 × 1300 = 1040) 이렇게 수입 초콜릿은 1300₩에 한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수출 약과는 0.8$에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황이라면, 수출량이 늘어나고 수입량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도표2] - 환율 상승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상황

개당 가격	수입량 / 수출량	수입액 / 수출액
초콜릿: 1$ (원화1300₩)	수입량 50개 (50개 감소)	수입액 **50$** (-50$)
약과: 0.8$	수출량 150개 (50개 증가)	수출액 **120$** (+20$)

이렇게 되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빼니 **70$**가 남습니다. 경상 수지가 70$ 흑자겠군요!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은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입량과 수출량의 변화가 큰 경우입니다. 만약,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면, 수입량과 수출량의 변화가 작아서 경상 수지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입 초콜릿이 1000₩에서 1300₩으로 올랐지만, 초콜릿을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입량이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고, 미국에서 약과가 예전보다 0.2$나 싸게 팔리지만 그다지 소비량이 늘어나지 않아 105개로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면 다음과 같이 경상 수지에 적자가 납니다.

[도표3] - 국내외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상황

개당 가격	수입량 / 수출량	수입액 / 수출액
초콜릿: 1$ (원화1300₩)	수입량 95개 (5개 감소)	수입액 **95$** (-5$)
약과: 0.8$	수출량 105개 (5개 증가)	수출액 **84$** (-16$)

[도표 3]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빼 보니 **-11$** 적자가 났습니다. 환율이 오르기 전에는 0$였는데, 가격 조정도 이루어졌고, 수입량이 줄었고 수출량은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경상 수지는 악화된 것이죠.

위의 [도표3]과 같은 장기적인 현상과, J커브 현상에서 일어나는 단기적 경상 수지의 악화 현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도표3]이 보여주는 문제는 **수요 구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수입량이 더 줄어들거나 수출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즉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장기적인 현상입니다. 반면 J커브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장의 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현상이지요.

또한 [도표3]은 가격 및 물량 조정이 모두 끝난 결과적 상황인 것에 비해, J커브 현상은 가격 및 물량 조정이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과정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표3]에서는 환율이 상승한 만큼 초콜릿의 원화표시가격도 1300₩으로 상승되어 있는데요, J커브 현상이 일어나는 가격조정기에는 환율이 상승했음에도 초콜릿이 여전히 1000₩으로 표시되어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상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 한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J커브의 형태가 보여 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

한편,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 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한다.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이 선호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환율 :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
* 경상 수지 : 상품(재화와 서비스 포함)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클 때는 흑자, 작을 때는 적자로 구분함.

31. ㉡에 대해 〈보기〉처럼 이해한다고 할 때,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_____더니,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만 믿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말이군.

①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 떨어지기를 바란다
➡ (O)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이익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뜻하는 관용구이죠. 평가원에서는 2016학년도 이후부터 속담이나 한자성어를 선지로 구성하는 문제는 더 이상 출제하고 있지 않으나, 기출에 나온 속담이나 한자성어는 한국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②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 (X) 언덕이 있어야 소도 가려운 곳을 긁을 수 있다는 뜻으로, 누구나 의지할 곳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시작하거나 이룰 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어렵다
➡ (X)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

④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 (X) 아무리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간혹 실수할 때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 (X)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다는 말.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44. 위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O)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마다 한 문단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② 채권의 지급 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고 있다.

➡ (O) '예를 들어~'로 시작하고 있으니 예를 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③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채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X)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은 '유추'인데요, 이 글에는 유추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④ 금리가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O) 금리 상승(원인) → 채권의 현재가치 하락(결과)
채권의 현재가치 하락(인) → 채권 가격 하락(과)

⑤ 채권의 의미를 밝히고 그 종류를 들고 있다.

➡ (O) 채권의 의미와 종류가 모두 나타납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45.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①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액면 금액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이다.

➡ (X) 채권의 현재 가치는 만기일에 받을 '액면 금액'을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한 값과, 만기일까지 받을 모든 '이자액'을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한 값을 합한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이자액'을 빼버린다면 이도 저도 아닌 아무말 대잔치가 됩니다.

② 채권의 순수익은 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액을 합산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 (X) **순수익** = **현재 가치**(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 + 액면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 **- 매입 가격**

③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 (X)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도 하락한다고 했으니, 반대로 채권의 현재 가치가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도 상승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의 현재 가치는 높아요. 따라서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옳은 추론입니다.

④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 (O) 위험한 채권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치'가 100만 원인 두 채권 A와 B가 있다고 하고, A 발행 기업의 지급 불능 위험이 높아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럼 A의 매입 가격은 상대적으로 B보다 낮게 형성되겠지요? 예를 들어, A는 매입가 50만 원, B는 매입가 9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순수익'은 '현재 가치'에서 '매입 가격'을 뺀 것입니다. 물론 현실화되지 않은 이익이긴 하지만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A는 순수익이 50만원인데 B는 순수익이 10만원이겠네요. 위험을 감수하고 A를 투자하는 이유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적절한 선지입니다.

⑤ 일반적으로 지급 불능 위험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액면 이자율이 높다.

➡ (X) 아무말 대잔치입니다. 지급 불능 위험이 낮고 높음은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액면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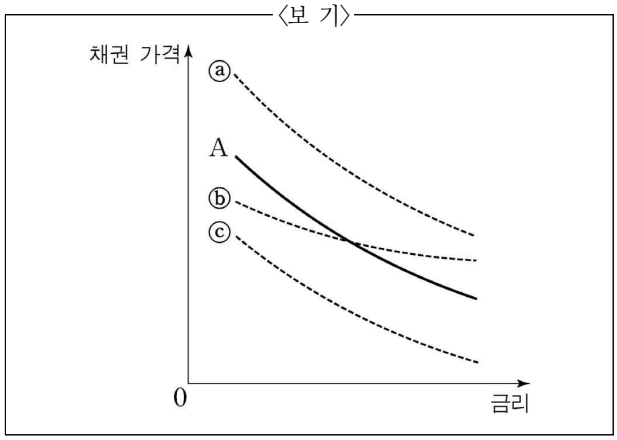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46. 〈보기〉의 A는 어떤 채권의 가격과 금리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위 글의 ㉠과 ㉡에 따른 A의 변화 결과를 바르게 예측한 것은?

〈보 기〉



➡ ㉠ :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답니다. 금리가 오르고 내려도 채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게 덜하다는 것이겠죠.

<보기>의 그래프는 금리의 높고 낮음에 따른 채권 가격의 높고 낮음에 대한 그래프네요. 원래 채권 A는 <보기>의 그래프와 같이 금리가 오름에 따라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우하향의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 따른 A의 변화 결과는 금리 변화에 다른 채권 가격 변화의 폭이 A보다 작은 곡선-ⓑ가 적절하겠습니다.

➡ ㉡ : 주식 시장이 호황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권 상품은 많은데 구매자들이 주식 시장으로 많이 가버렸으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게 상식적이겠네요.

따라서 ㉡에 따른 A의 변화 결과는 A보다 전반적으로 채권 가격이 낮게 형성된 곡선-ⓒ가 적절하겠습니다.

	㉠	㉡
①	ⓐ	ⓒ
➡ (X)		
②	ⓑ	ⓐ
➡ (X)		
③	ⓑ	ⓒ
➡ (O)		
④	ⓒ	ⓐ
➡ (X)		
⑤	ⓒ	ⓑ
➡ (X)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본다. '한계 비용'이란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재화의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이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진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따라 줄고,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위에서 설명한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도, 전기, 철도와 같은 공익 서비스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한계 비용 수준으로 가격(=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공익 서비스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 한계 비용은 매우 적다. 이러한 경우,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다.

[A] 예컨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6억 달러이고, 톤당 1달러의 한계 비용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상수도 서비스를 가정해 보자. 이때 수돗물 생산량을 '1톤, 2톤, 3톤, …'으로 늘리면 총비용은 '6억 1달러, 6억 2달러, 6억 3달러, …'로 늘어나고, 톤당 평균 비용은 '6억 1달러, 3억 1달러, 2억 1달러, …'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들더라도 한계 비용 아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한계 비용으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적으므로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에 손실분만큼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보조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다른 부문에 들어갈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요금을 정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져 기업이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금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극대화된다.

➡ (O)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이 시점이 바로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지는 때라고 하네요.

②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경우에는 한계 비용과 같은 경우에 비해 결국 그 재화의 생산량이 줄어든다.

➡ (O)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써놨네요.

③ 공익 서비스와 일반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건은 서로 같다.

➡ (O) 문장의 앞뒤를 바꿔 보면 더 쉽습니다. '공익 서비스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한계 비용 수준으로~'라고 재구성할 수 있겠네요. 공익 서비스나 일반 재화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목표로 한다면, 가격을 한계 비용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같다는 것이죠.

④ 정부는 공공요금을 한계 비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정책을 펼 수 있다.

➡ (O)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러한 손실분만큼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공공요금을 한계 비용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공익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⑤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에서 결정하면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 (X) 본문에서는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에서 결정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으니 틀린 말입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았을 뿐, 낭비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제일 첫 문단에서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 다시 보세요.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원의 낭비가 없다'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가 서로 엮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었다면 자원의 낭비가 일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본다. '한계 비용'이란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재화의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이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진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따라 줄고,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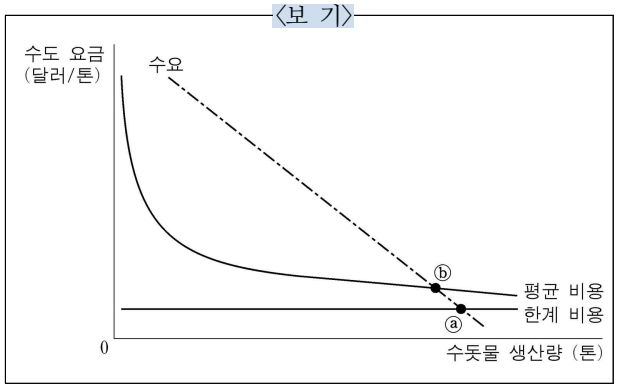
위에서 설명한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도, 전기, 철도와 같은 공익 서비스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한계 비용 수준으로 가격(=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공익 서비스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 한계 비용은 매우 적다. 이러한 경우,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다.

[A] 예컨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6억 달러이고, 톤당 1달러의 한계 비용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상수도 서비스를 가정해 보자. 이때 수돗물 생산량을 '1톤, 2톤, 3톤, …'으로 늘리면 총비용은 '6억 1달러, 6억 2달러, 6억 3달러, …'로 늘어나고, 톤당 평균 비용은 '6억 1달러, 3억 1달러, 2억 1달러, …'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들더라도 한계 비용 아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한계 비용으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적으므로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에 손실분만큼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보조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다른 부문에 들어갈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요금을 정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져 기업이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금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

36. 〈보기〉는 [A]의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위 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본다.

➡ (O) a는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요금 즉, 가격이 결정되면 생산량에 따른 생산 비용만 회수되기 때문에 초기 시설 투자 비용 6억 달러가 회수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몇 톤을 생산해서 팔든, a로 가격이 정해지면 수도 사업자는 6억 달러의 손실을 입습니다.

②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요금은 톤당 1달러이다.

➡ (O) a는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톤당 1달러의 한계 비용으로 수돗물을 생산한다고 하였으니, 그래프에서 한계 비용은 항상 1달러라고 보면 되겠군요.

③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의 총수입과 총비용은 같다.

➡ (O) b는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경우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서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입지 않지요. 그 말은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다는 뜻입니다.

④ 수돗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의 격차가 줄어든다.

➡ (O) <보기>의 그래프의 원점에서 x축을 따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돗물의 생산량(톤)이 증가하죠?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 곡선의 차이는 어떤가요? 계속 줄어들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량이 1t일 때 평균 비용은 6억 1$, 한계 비용은 1$이니 격차는 6억$입니다.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생산량이 6억t이라고 한다면, 평균 비용은 2$가 되겠죠. 계속 줄어드네요. 10억t을 생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6$(1달러60센트)로 더욱 줄어드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네요.

⑤ 요금 결정 지점이 ⓐ에서 ⓑ로 이동하면 사회 전체의 만족도는 증가한다.

➡ (X) 사회 전체의 만족도는 하락합니다.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최대값인 상황은 요금이 a일 때, 즉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될 때입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본다. '한계 비용'이란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재화의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이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진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따라 줄고,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위에서 설명한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도, 전기, 철도와 같은 공익 서비스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한계 비용 수준으로 가격(=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공익 서비스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 한계 비용은 매우 적다. 이러한 경우,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다.

[A] 예컨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6억 달러이고, 톤당 1달러의 한계 비용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상수도 서비스를 가정해 보자. 이때 수돗물 생산량을 '1톤, 2톤, 3톤, …'으로 늘리면 총비용은 '6억 1달러, 6억 2달러, 6억 3달러, …'로 늘어나고, 톤당 평균 비용은 '6억 1달러, 3억 1달러, 2억 1달러, …'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들더라도 한계 비용 아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한계 비용으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적으므로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에 손실분만큼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보조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다른 부문에 들어갈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요금을 정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져 기업이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금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

37. 문맥상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투입(投入)되는

➡ (O) 「동사」【…에】

「1」 던져져 넣어지다.

「2」 사람이나 물자, 자본 따위가 필요한 곳에 넣어지다.

② ㉡ : 초래(招來)한다

➡ (O) 「동사」【…을】

「1」 일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을 생겨나게 하다.

「2」 불러서 오게 하다.

③ ㉢ : 추정(推定)하면

➡ (X) 「동사」

1【…을 …으로】【 …을 -고】【 …으로】【 -고】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하다.

2【…을】

「1」『법률』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다.

「2」『수학』 통계에서, 어떤 모집단(母集團)으로부터 뽑아낸 표본을 바탕으로 하여 그 모집단의 평균·분산 따위를 헤아리다.

④ ㉣ : 지급(支給)하는

➡ (O) 「동사」【…에/에게 …을】

「1」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주다. ≒방지하다. 「반대말」 수취하다(受取하다)

「2」『법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어음 따위를 채권자에게 주다.

⑤ ㉤ : 감소(減少)하는

➡ (O) 「동사」【(…을)】

양이나 수치가 줄다. 또는 양이나 수치를 줄이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성'이라 한다.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인접한 양봉업자에게 벌꿀 생산과 관련한 이익을 준다든지, ㉠공장의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여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A] 예를 들어, 과수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a라고 할 때, 생산량을 Qa보다 늘리면 과수원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과수원의 이윤 감소보다 양봉업자의 이윤 증가가 더 크다면, 생산량을 Qa보다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수원이 자발적으로 양봉업자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생산량을 Qa보다 늘릴 이유는 없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러한 비효율성의 해결책이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보조금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면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학은 모든 시장 거래와 정부 개입에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외부성은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보조금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협상을 쉽게 해 주는 법과 규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정부 개입은 비효율성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개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29.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별 경제 주체는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 (O) 개별 경제 주체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손해'만' 고려한다는 뜻이겠군요.

②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외부성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 (X) [A]에 예로 든 외부성 사례는 과수원 운영자가 제3자(양봉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③ 전통적인 경제학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 (O) 전통적인 경제학은 외부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사회 전체의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정부 개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정부 개입에 드는 비용을 '간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아서 사용하는 해결책에 또 비용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정부 개입에 따른 비용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비효율성의 해결책으로, 또다시 비효율을 일으키는, 정부 개입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간과하다: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

④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이익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면 그 사회는 사회적 효율성이 충족된 것이 아니다.

➡ (O)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아직 극대화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것을 본문에서는 '비효율성'이 초래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효율성이 충족된 것은 더 이상 이익을 실현할 여지가 없는, 이익이 극대화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⑤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받는 당사자들 사이에 그 손익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외부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 (O) '거래'가 키워드입니다. 본문의 제일 처음 문장을 다시 읽어 봅시다.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이라는 문구 보이시죠? 따라서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지면 외부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성'이라 한다.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인접한 양봉업자에게 벌꿀 생산과 관련한 이익을 준다든지, ㉠공장의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여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A] 예를 들어, 과수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a라고 할 때, 생산량을 Qa보다 늘리면 과수원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과수원의 이윤 감소보다 양봉업자의 이윤 증가가 더 크다면, 생산량을 Qa보다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수원이 자발적으로 양봉업자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생산량을 Qa보다 늘릴 이유는 없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러한 비효율성의 해결책이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보조금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면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학은 모든 시장 거래와 정부 개입에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외부성은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보조금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협상을 쉽게 해 주는 법과 규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정부 개입은 비효율성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개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30. ㉠의 사례를 [A]처럼 설명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보 기〉

공장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b라고 할 때, 생산량을 Qb보다 (㉮) 공장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더 (㉯), 생산량을 Qb보다 (㉰)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	㉯	㉰
①	줄이면	크다면	줄이는

➡ (O) ㄱ의 사례를 [A]처럼 설명한다는 것은, ㄱ에 나타난 공장과 주민 간의 문제를, 공장과 주민들의 이윤 및 사회 전체의 이윤과 관련하여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기>를 보겠습니다. '공장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b라고 할 때, 생산량을 Qb보다' 줄이든 늘리든 공장의 이윤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금 ㄱ의 맥락을 보면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킨다고 했으니 (줄이면)이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다)는 쉽게 추론할 수 있죠. 생산량 감소로 인한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더 (크다면), 생산량을 Qb보다 (줄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②	줄이면	크다면	늘리는
③	줄이면	작다면	줄이는
④	늘리면	작다면	줄이는
⑤	늘리면	작다면	늘리는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연금 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사적 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므로,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 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한편 공공 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무상으로 부조가 이루어지므로,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모두 써 버리고 노년에는 공공 부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한 뒤, 적립된 연금 기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은퇴한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이 제도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 세대의 보험료로 부모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이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두 입장은 요사이 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래 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가입자들이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맡긴 신탁 기금으로 보고,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대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이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연금 기금을 일종의 신탁 기금으로 규정해 온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 데 이 막대한 돈을 직접 활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 공공 부조 :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사회적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제도.

3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연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다양하다.

➡ (O) 윗글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연금 제도의 목적 달성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1.사적 연금, 2.공공 부조, 3.공적 연금, 세 가지네요. 세 가지면 다양한 것일까요? 세 가지로는 조금 단조롭나요? 애매하죠? 하지만 평가원에서는 1번 선지를 적절한 선지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세 가지 이상이 제시된다면 '다양하다'라는 말과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합시다.

② 공적 연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여 사적 연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O) 그렇습니다. '국가가 이 제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했으니, 사적 연금과 공적 연금 제도는 함께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③ 공적 연금 제도를 시행한 뒤에는 공공 부조를 폐지해야 한다.

➡ (X) 공적 연금 제도 자체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 부조의 부작용에 대응한다는 말에는, 공공 부조가 유지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④ 공공 부조가 낳는 도덕적 해이는 국민들의 납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 (O) 공공 부조는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젊을 때 흥청망청 쓰고, 늙어서 세금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렇지 않은 국민들은 이 부도덕한 사람들을 공공 부조로 먹여 살리느라 납세 부담이 증가되겠군요.

⑤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 재분배의 수단이 될 수 있다.

➡ (O)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이 매우 높아서 총 보험료 1억 원을 납부한 A와 소득이 적어서 총 보험료 5천만 원을 납부한 B가 서로 비슷한 연금을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고소득자 A의 보험료가 창출한 이익의 일부를 B에게 재분배한 셈이 됩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연금 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사적 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므로,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 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한편 공공 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무상으로 부조가 이루어지므로,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모두 써 버리고 노년에는 공공 부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한 뒤, 적립된 연금 기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은퇴한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이 제도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 세대의 보험료로 부모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이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두 입장은 요사이 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래 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가입자들이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맡긴 신탁 기금으로 보고,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대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이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연금 기금을 일종의 신탁 기금으로 규정해 온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 데 이 막대한 돈을 직접 활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 공공 부조 :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사회적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제도.

40.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에서는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본다.

➡ (O) 그렇습니다. (ㄱ이 전자이고 ㄴ이 후자입니다. 여기서 '전자'는 삼성전자의 전자가 아니라 '앞의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② ㉠에서는 연금 기금을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수익률이 높은 대기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 (X) ㄱ이 아니라 ㄴ의 주장입니다.

③ ㉠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연금 기금의 법적 성격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

➡ (X) ㄱ은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겠습니다.

④ ㉡에서는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공적 연금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더욱 강하게 요구한다.

➡ (X) 후자인 ㄴ은 이러한 소득 재분배를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⑤ ㉡에서는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 데 연금 기금을 직접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 (X) 전자인 ㄱ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131141《2013학년도 수능 문항 해설》

연금 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사적 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므로,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 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한편 공공 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무상으로 부조가 이루어지므로,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모두 써 버리고 노년에는 공공 부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한 뒤, 적립된 연금 기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은퇴한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이 제도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 세대의 보험료로 부모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이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두 입장은 요사이 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래 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가입자들이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맡긴 신탁 기금으로 보고,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대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이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연금 기금을 일종의 신탁 기금으로 규정해 온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 데 이 막대한 돈을 직접 활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 공공 부조 :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사회적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제도.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공적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그중 상당수가 고용이 불안정한 30~4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 공적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자도 상당히 많아 누적 체납액이 2,000억 원을 넘어섰다.

① (가)를 보니, 공적 연금 기금을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겠군.

➡ (O) (가)에서는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이유는 고용 불안정 때문이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보험료 체납이 늘어나면 연금이 불안정해지겠죠. 그런데 만약 공적 연금 기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게 된다면, 가입자의 고용이 안정화될 수 있고, 이는 곧 연금 보험료의 체납 감소로 이어져 결국 연금 제도가 안정화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납득할 만한 선지입니다.

*체납하다: 「동사」【…을】 세금 따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고 미루다.

② (나)를 보니, 공적 연금 제도에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철저히 집행해야 하겠군.

➡ (O) 본문에 나타나듯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강제 가입됩니다. 그런데 (나)에서는 소득이 높아 연금 보험료를 충분히 낼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체납하는 고소득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적 연금의 역선택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체납을 방치한다면 공적 연금 제도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철저히 징수해야 공적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겠네요.

③ (나)를 보니, 고의 체납으로 인해 공적 연금 제도에도 역선택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군.

➡ (O) 고소득자의 입장에서는 공적 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죠. 만약 선택권을 준다면 가입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역선택 현상입니다. 그런데 공적 연금은 가입이 의무죠. 따라서 역선택 현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체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입하지 않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이를 두고 선지에서는 '역선택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군.'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④ (가)와 (나)를 보니, 적립될 공적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군.

➡ (O) 고소득자는 고의로 체납하고, 저소득자는 부득이 체납하면 결국 연금 기금이 고갈되겠죠.

⑤ (가)와 (나)를 보니,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공적 연금에 강제 가입시키는 제도를 완화해야 하겠군.

➡ (X) (가)와 (나)를 보면, 가입 강제 제도를 완화할 경우 연금 제도 유지가 쉽지 않겠죠?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20131142《2013학년도 수능 문항 해설》

연금 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사적 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므로,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 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한편 공공 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무상으로 부조가 이루어지므로,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모두 써 버리고 노년에는 공공 부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한 뒤, 적립된 연금 기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은퇴한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이 제도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 세대의 보험료로 부모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이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두 입장은 요사이 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래 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가입자들이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맡긴 신탁 기금으로 보고,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대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이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연금 기금을 일종의 신탁 기금으로 규정해 온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 데 이 막대한 돈을 직접 활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 공공 부조 :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사회적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제도.

42.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① ⓐ :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 옴.
➡ (X) 도모: 「명사」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움.

② ⓑ :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 (O)

③ ⓒ :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 (O)

④ ⓓ : 무엇을 만들어서 이룸.
➡ (O)

⑤ ⓔ : 늘리고 넓혀 충실하게 함.
➡ (O)

제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